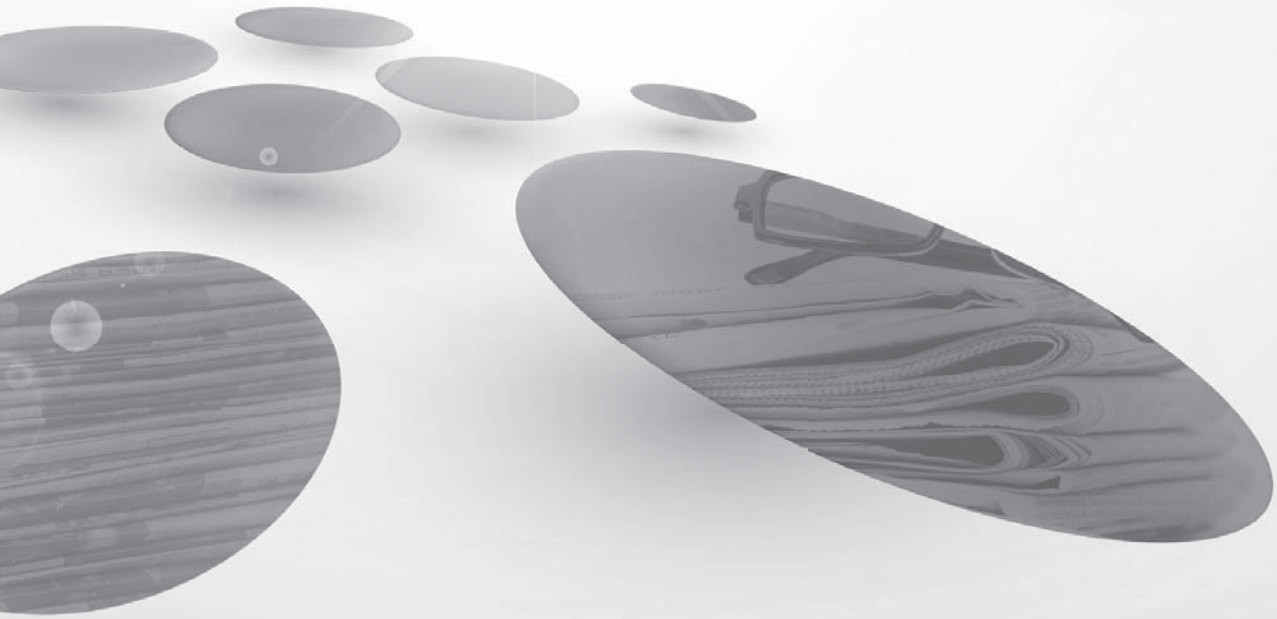
기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2011-1-1 독자불만처리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1년 1월 4일자 A5면 「〈1부〉아이들에게 꿈을 ①태초에 차별이 있었다/86점〈서초구A학교〉 vs 75점〈노원구B학교〉 vs 69점〈금천구C학교〉/ '한글 디바이드' 심각… 서울 3개 초등학교 2학년 국어능력 평가해보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東亞日報 2011년 1월 4일자 A5면 「〈1부〉아이들에게 꿈을 ①태초에 차별이 있었다/ 86점〈서초구A학교〉 vs 75점〈노원구B학교〉 vs 69점〈금천구C학교〉/ '한글 디바이드' 심각… 서울 3개 초등학교 2학년 국어능력 평가해보니」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위 기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사 제목에서부터 국어능력 점수 밑에 특정지역(서초구, 노원구, 금천구)을 명시하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보도한 것은 마치 그 지역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도 소형 임대아파트 또는 연립 ·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낮은 주민이 있고 강북에도 중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높은 주민이 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능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 동일 지역 내에서 경제력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하거나 부득이 그럴 사정이 아니었다면 특정지역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강남 학군으로 이사까지 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기사는 지역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기사입니다.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東亞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동아일보 제27818호 A8 — 다시 공존을 향해 동합을 위한 동아일보의 제언 — 2011년 1월 4일 화요일 A5

〈1부〉 아이들에게 꿈을 ① 태초에 차별이 있었다

86점 vs 75점 vs 69점
(서초구 A학교) (노원구 B학교) (금천구 C학교)

'한글 디바이드' 심각… 서울 3개 초등학교 2학년 국어능력 평가해보니

서초구 A학교 C 8.4 B 33.3 A 58.3

금천구 C학교 E 3.5 A 28.6 C 39.3 B 28.6

서초구 A학교 86.7점 33% 86.1 13.9

금천구 C학교 69.7점 75점 53.6 42.9

이런 현실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한글 창제의 취지를 밝힌 '여지예필(予之所以必)'의 마지막 구절.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익혀 몸으로든 실생 누리길 바랐던 세종의 뜻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실은 아직 세종의 여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에 대한 교육적 능력의 차이가 자녀의 한글 능력 차이로 대물림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벌려 놓기 때문이다.

● 공존의 장애물, 한글 디바이드

한글 디바이드는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의 학습능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에서의 한글 디바이드 줄이기는 공존의 필수조건이다.

한글 디바이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별하재단은 지난해 12월 21~23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언어력 검사(자연년령 10~12만큼, 100점 만점)'를 실시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가 자녀의 한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초구 A학교, 노원구 B학교, 금천구 C학교를 선정했다. 세 학교는 각각 강대동 변형 아파트 밀집 지역, 소형 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학년의 평균점수는 A학교 86.7점, B학교 75.6점, C학교 69.7점이었다. 3학년도 A학교 72.7점, B학교 58.4점, C학교 58.0점으로 A학교가 다른 두 학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어휘력,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 평가영역 전반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말썽이 부모 비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언어력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 답안지 분석에선 한글 디바이드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C학교의 한 3학년생은 "동화책"으로 시작하는 끝말잇기 문제의 답을 '구슬-자구-귀두리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3학년생은 '부모님께 대한 짧은 글쓰기'라는 문제에 "지방이"에 대한 글을 썼다. 문제 자체에 대한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증거다. B학교의 한 3학년생은 그림을 일기로 제구성하는 문제에서 "그런데는 '그러대로' '별러는 '뻐러'로, "그랬다"는 '그래다'라고 적은 답안을 제출했다. 받침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반면 A학교는 이처럼 읽기, 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답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 '심갑 학년 갈수록 격차 커질 것'

B, C학교는 A학교보다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한글 부진아들의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총점을 100~71점(평균 이상 구간), 70~41점(평균 이하 1구간), 40~0점(평균 이하 2구간) 등 세 구간으로 나눠 학생 분포 비율을 비교했더니 A학교는 평균 이하 2구간 비율이 1.4%에 불과한 반면 B학교는 12.3%, C학교는 11.3%로 10배 가까이 높았다.

김한 출제와 결과 분석을 맡은 한글교육 김수연 선임연구위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 능력은 사실상 부모가 대화나 독서, 놀이 등을 통해 자녀를 한글 사용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어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글 교육 여래적자 취약계층 부담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여건은 과거보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학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취학 전 한글을 깨친 아동 비율이 놀랍게 높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어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글 교육 여래적자 취약계층 부담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여건은 과거보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학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취학 전 한글을 깨친 아동 비율이 놀랍게 높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어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글 교육 여래적자 취약계층 부담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여건은 과거보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학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취학 전 한글을 깨친 아동 비율이 놀랍게 높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어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글 교육 여래적자 취약계층 부담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여건은 과거보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학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취학 전 한글을 깨친 아동 비율이 놀랍게 높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영어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모 소득 높은 강남 초등생 맞벌이 많은 강북보다 우수

대화·독서 통해 언어력 발달 부모 역할 무엇보다 중요해

국어 못하면 다른 과목도 부진 학력 격차도 커질수 있어 문제

(東亞日報 2011년 1월 4일자 A5면)

〈1부〉아이들에게 꿈을 ①태초에 차별이 있었다

86점 vs 75점 vs 69점

〈서초구A학교〉〈노원구B학교〉〈금천구C학교〉

'한글 디바이드' 심각… 서울 3개 초등학교 2학년 국어능력 평가해보니

■ 이런 현실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놓으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1446년 세종대왕이 한글(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한글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지(御旨)'의 마지막 구절.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익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바랐던 세종의 뜻이 집약돼 있다.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실은 아직 세종의 어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능력의 차이가 자녀의 한글 능력 차이(한글 디바이드)를 심각한 수준으로 벌려 놓기 때문이다.

○ **공존의 장애물, 한글 디바이드**

한글 디바이드는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른 교과의 학습능력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으려면 공교육의 출발점인 초등학교에서의 한글 디바이드 좁히기는 공존의 필수조건이다.

한글 디바이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은 지난해 12월 21~23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언어력 검사(학년별 10 · 12문항, 100점 만점)를 실시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차이가 자녀의 한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초구 A학교, 노원구 B학교, 금천구 C학교를 선정했다. 세 학교는 각각 중대형 평형 아파트 밀집 지역, 소형 임대 아파트 밀집 지역, 연립 · 다세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학년의 평균점수는 A학교 86.7점, B학교 75.6점, C학교 69.7점이었다. 3학년도 A학교 72.7점, B학교 58.4점, C학교 58.0점으로 A학교가 다른 두 학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어휘력,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 평가영역 전반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맞벌이 부모 비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언어력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 답안지 분석에선 한글 디바이드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다. C학교의 한 3학년생은 '동화책'으로 시작하는 끝말잇기 문제의 답을 '구슬-지구-귀뚜라미'라고 적었다. 또 다른 3학년생은 '부모님에 대한 짧은 글을 쓰라'는 문제에 '지렁이'에 대한 글을 썼다. 문제 자체에 대한 독해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증

거다. B학교의 한 2학년생은 그림을 일기로 재구성하는 문제에서 '그런데'는 '그러대'로 '빨리'는 '빠리'로, '그랬다'는 '그래다'라고 적은 답안을 제출했다. 받침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반면 A학교는 이처럼 읽기, 쓰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답안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 **"상급 학년 갈수록 격차 커질 것"**

B, C학교는 A학교보다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한글 부진아동의 비율도 월등히 높았다. 총점을 100~71점(평균 이상 구간), 70~41점(평균 이하 1구간), 40~0점(평균 이하 2구간) 등 세 구간으로 나눠 학생 분포 비율을 비교했더니 A학교는 평균 이하 2구간 비율이 1.4%에 불과한 반면 B학교는 12.3%, C학교는 11.3%로 10배 가까이 높았다.

문항 출제와 결과 분석을 맡은 한솔교육 김수연 선임연구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글 능력은 사실상 부모가 대화나 독서, 놀이 등을 통해 자녀를 한글 사용 환경에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자극을 줬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휘력, 사고력, 독해력, 표현력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글 디바이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돼 학력 격차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는 점.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교과 내용이 어려워지는 4학년이 될 때까지 한글 부진이 만회되지 않는 학생은 경험상 다른 교과목 학습에서도 부진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한글 디바이드가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 **한글 교육 어려워져 취약계층 부담**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여건은 과거보다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교 교감은 "취학 전 한글을 깨친 아동 비율이 늘면서 입학 후 간단한 한글 자모 읽기, 쓰기 연습이 끝나면 바로 단어와 문장을 다룬다"며 "취학 전 한글을 못 깨친 학생은 부담

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 아동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지정받아 방과후 활동 형태로 독서지도나 한글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 그러나 한글 지도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학교도 드물고,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학교는 이마저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

2-② 東亞日報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본보의 '다시 공존을 향해' 시리즈는 교육기회와 복지 등 우리 사회의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계층이 차별 없이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서초구, 노원구, 금천구의 전 주민이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특별취재팀은 이 현실을 냉철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선 개선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서울 서초구의 A초등학교, 서울 금천구의 B초등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A초등학교 서울의 B초등학교'라고 쓴다면 범위가 너무 막연해집니다. 서울시보다 그 범위를 좀 더 좁혀 구까지 표시해 주는 것이 현실성을 높이고 문제 지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보자 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모의 빈부 격차는 자녀 교육비의 격차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향후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각종 매체의 보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위 기사 또한 東亞日報 특별취재팀이 부모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의 한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서울시내 3개 초등학교(서초구 A학교, 노원구 B학교, 금천구 C학교)를 선정하여 언어력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울의 강북이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이고 그에 따라 지역간 학력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기획의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조사 표본의 크기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서울의 서초구 D학교, 노원구 E학교, 금천구 F학교 등으로 대상을 바꾸어 국어능력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능력 점수 밑에 지역별로 유형화한 제목을 단 보도행태는 그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자녀들로 하여금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 독자불만처리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1년 1월 26일자 4면「경주시 "사적지 경관조명 켤까 말까"」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경북일보 2011년 1월 26일자 4면「경주시 "사적지 경관조명 켤까 말까"」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사는 "경주시가 한파로 인해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서 문화유적을 비롯한 야간 경관조명 점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에 대한 경주시의 점등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기사는 하루 앞선 지난 25일 연합뉴스에서 먼저 게재한 기사다. 리드 문단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연합뉴스 기사의 전개 및 구성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경북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북일보 1월 26일자 4면〉

경주시 "사적지 경관조명 켤까 말까"

신라천년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이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빛이 바래질 전망이다.
경주시는 한파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곳곳에서 에너지 절감 바람이 불면서 야간 경관조명 점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관광객들에게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사적지와 관문도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불을 밝히고 있다.
안압지, 계림, 첨성대, 감은사지 등 주요 사적지 8곳에 1천331개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일몰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점등하고 있다.사적지 야간 조명으로 드는 예산만 연간 3천500만원 정도다.
또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 도로인 서라벌대로 900m와 장군교 390m 구간에 설치한 600여개의 경관조명도 사적지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25일자〉

경주시 전력소비 급증에 경관조명 '고민'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한파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곳곳에서 에너지 절감 바람이 불면서 경북 경주시가 야간 경관조명 점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관광객들에게 밤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사적지와 관문도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불을 밝히고 있다.
안압지, 계림, 첨성대, 감은사지 등 주요 사적지 8곳에 1천331개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일몰 이후부터 밤 11시까지 점등하고 있다.
사적지 야간 조명으로 드는 예산만 연간 3천500만원 정도다.
또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 도로인 서라벌대로 900m와 장군교 390m 구간에 설치한 600여개의 경관조명도 사적지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경관조명을 점등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에서 사적지 조명을 1년 내내 밤늦게까지 밝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겨울철은 관광 비수기로 밤에 관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굳이 사적지와 도로를 훤히 밝히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따라 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간 통행이 적은 홍무로와 보문로의 경관조명은 작년 11월부터 점등하지 않고 있으나 사적지와 관문 도로는 관광객에게 경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관조명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가로등은 자정부터 격등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사적지와 주요 도로에는 경관조명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설 전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점등하고 있다"며 "안압지는 밤 10시까지 관람객이 입장해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전등으로 점차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성일기자 kwak@kyongbuk.co.kr	시는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경관조명을 점등하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에서 사적지 조명을 1년 내내 밤 늦게까지 밝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겨울철은 관광 비수기로 밤에 관광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굳이 사적지와 도로를 훤히 밝히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간 통행이 적은 홍무로와 보문로의 경관조명은 작년 11월부터 점등하지 않고 있으나 사적지와 관문 도로는 관광객에게 경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관조명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가로등은 자정부터 격등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절을 앞두고 사적지와 주요 도로에는 경관조명 시간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이번 설 전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점등하고 있다"며 "안압지는 밤 10시까지 관람객이 입장해 경관조명은 밤 11시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전등으로 점차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ru@yna.co.kr

2-② 경북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리드 문장만 자사 기자가 작성하고 그 외의 부분은 연합뉴스 1월 25일 송고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유사한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북일보는 기존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타 언론사 기

사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행위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3 독자불만처리
大邱日報 발행인 이 태 열

〈주 문〉

大邱日報 2011년 1월 21일자 3면「'한나라당 심장부' 대구 · 경북 '핫바지' 전락」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2011년 1월 21일자 3면「'한나라당 심장부' 대구 · 경북 '핫바지' 전락」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대구 · 경북에 대해 '한나라당 심장부', '정치미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대구경북은 형님예산과 각종 사업의 '특혜시비'로 논란을 겪었으며, 인사문제에서도 이 지역 인물이 주요 요직(3군 사령관 영남권 독식)을 차지해 왔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 지역이 누린 독점적 지위(다른 지역에서 'TK특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에 대해선 일체 조용했던 〈대구일보〉가 갑자기 '대구경북 핫바지', '정치미아'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이와 같은 〈대구일보〉의 보도태도는 뉴스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지역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大邱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大邱日報 2011년 1월 21일자 3면〉

'한나라당 심장부' 대구 · 경북 핫바지 전락
신공항 등 지역간 헤게모니 싸움 번지며 정치미아 신세

대구 · 경북(TK)이 '핫바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 한나라당 심장부 대구 · 경북이 동남권 신공항, 국제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유치 경쟁이 지역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치미아 신세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위기는 흡사 지난 1998년 위천국가공단 무산, 2000년 삼성상용차 지역 퇴출 등 헤게모니 싸움에서 철저히 배신당한 아픔을 연상케 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번듯한 대기업 하나 유치된 적 없고 18년 동안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일부 야당들은 '보수 · 꼴통', '형님예산' 운운하며 대구 · 경북을 비꼬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과학벨트 선정 논란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가 4년여 동안 타당성 조사를 벌여 내부적으로 밀양이 최적지로 평가받은 사안을 미루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첨예한 사안들이 대부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일부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제로섬 게임'이라는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시종 충남지사는 20일 과학벨트와 관련,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만약 과

학비즈니스벨트 약속을 호남지역이나 영남지역에 했었더라면 변경한다는 'ㅂ' 자도 못 꺼냈을 것이다.", "충청도이기 때문에 만만해서 보는 것 아니냐. 우리 충청도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만약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선거 때 우리 충청권에서 표로 심판 할 것이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대표도 이날 고위정책위 회의에서 "더욱 가관인 것은 날치기로 형님예산을 확보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왜 경북에는 (과학벨트를) 못 가져 가느냐'고 나서고 있다"며 "형님, 이제 그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라며 대구 · 경북을 빗대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배경에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충청권은 과학벨트가 불발되면 '표로서 심판하겠다'며 현 여권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카드로 제격이다.

또 신공항을 두고 일부 부산의원들이 '안 되면 탈당까지 해야 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논리는 고스란히 대구 · 경북에게는 피해로 돌아온다.

강주열 신공항 결사추진위 본부장은 "신공항 평가에서 밀양이 최적지로 나왔고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충청권 논리대로 라면 이 대통령의 공약인 신공항 선정도 벌써 밀양으로 결정됐어야 한다"며 대구 · 경북이 역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표 대선가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충청권과 대구 · 경북, 부산 등이 친 한나라당 지역이라 피해를 맛본 곳이 다음 선거에서 등을 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밀양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는다면 TK 민심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지금은 잠잠하지만 결코 TK가 핫바지, 수구 · 꼴통 보수가 아님을 선거 민심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승탁 기자 kangst@idaegu.com

2-② 大邱日報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 왔다.

대구 · 경북 핫바지 기사는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됐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 당시 안상수 대표, 지역 16개 시 ·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 경북 민심이 이렇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복사본을 제시해 큰 이유가 된 기사입니다.

기사 중에도 있지만 대구는 지난 18년 동안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를 차지하는 등 대구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 1997년 위천국가공단 무산, 2000년 삼성 상용차 지역에서 퇴출 등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차별은 이루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이번 핫바지 기사는 대구 · 경북이 현재 느끼는 민심이 바로 '핫바지'라는데 이견은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후 연합뉴스와 대구 일부 신문에서도 이 같은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라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임을 밝힙니다.

대구 · 경북은 한나라당의 심장부라고 안상수 대표 등이 강조하지만 실제 대구경북이 얻은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한나라당에 표를 던지다 보니 거의 정치적 미아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정치권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는 절대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일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구 · 경북 지역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논리 다툼으로 인해 동남권 신공항 입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大邱日報 의견표명서에 따르면, 위 기사는 지역의 민심과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기사일 뿐 절대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작성한 기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사 제목에서부터 '대구 · 경북 핫바지 전략', '정치미아' 라고 단정적으로 편집한 보도는 지역발전과 지역이익 대변이 지방 신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지역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③항(사회적 책임),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4 독자불만처리
영남일보 발행인 배 성 로

〈 주 문 〉

일보 2011년 1월 19일자 6면「"내년 금배지 '밀양 신공항'에 있다"」제하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2011년 1월 19일자 6면「"내년 금배지 '밀양 신공항'에 있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동남권 신공항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구경북민이 지역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며, 지역의 친박의원 및 이인기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인터뷰를 싣고 있다. 하지만 두 명의 인터뷰대상자는 "내년 금배지 '밀양 신공항'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이 말을 한 화자(話者)는 없음에도 마치 지역유권자 또는 공천권자의 선택 기준이 '밀양 신공항'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보다는 기자와 해당 신문사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제목

을 편집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영남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남일보 2011년 1월 19일자 6면〉

"내년 금배지 '밀양 신공항'에 있다"
지역 민심, 국회의원 활약상 냉정히 평가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총선 잣대 예고

정치권이 난리다.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 대구 · 경북이 사활을 걸고 유치를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대구 · 경북민들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역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누구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는 태도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의원들로선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구 의원들은 신경을 쏟아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한나라당과 지역 의원에 대한 바닥 민심이 싸늘하다는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물론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조심스럽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선 아예 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한다.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다. 최근 유승민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을)과 이인기 경북도당위원장(성주-고령-칠곡)이 시 · 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자, 안상수 대표가 '당황했다'

는 소리도 들린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 대구 ·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4개 광역단체와 부산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문제도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약속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입지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대구 · 경북은 울산과 협약을 맺고 유치에 나섰고, 충청권과 경기도 역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야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일각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찬성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친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과학벨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은 19일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통학회 대구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대식 영남대 교수가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의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기 도당위원장과 김광림 수석부위원장(안동)이 참석한다.

이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대구시당과 힘을 합쳐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② 영남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와 경북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영남과 호남, 충청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이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다. 현재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 부산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 경남, 울산이 힘을 합쳤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 영남권 신공항 밀양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정치권도 당연히 신공항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지역 유권자들의입장에서 대구와 경북을 위해 정치권이 얼마나 뛰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게재했다.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온실 속의 화초로 불렸다.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상이 부른 말이다. 그 말은 치열함이 없다는 뜻이다. 신공항 유치운동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이 치열함을 회복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했다.

유권자와 공천권자의 선택이 신공항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은 전체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제목만 문제를 삼은 것이다. 정치권의 활동을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공천권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영남권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최대 이슈이다.

영남일보는 지역민들이 바라는 대로 영남권 신공항이 밀양에 유치되는 데 언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권이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언론의 책무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남권 신공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한 친박의원과 이인기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으나 기사 본문에는 그러한 말을 한 화자(話者)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 전반부에서 인용없이 기자의 판단형식으로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유치가 무산될 경우 지역 의원들로선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기술,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제시해 놓았다. 그럼에도 기사 제목에서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내년 금배지 '밀양 신공항'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5 독자불만처리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每日新聞 2011년 1월 25일자 1면 「"경남 · 울산 주민도 밀양 더 선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每日新聞 2011년 1월 25일자 1면 「"경남 · 울산 주민도 밀양 더 선호"」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앞두고 대구 · 경북 · 울산 · 경남과 부산 간에 자치단체, 관계기관, 언론 간에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每日新聞〉이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과도하게 이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지난 24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400명, 경남 400명, 울산 200명 등 부울경지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신뢰도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75%가 가덕도를 선호, 경남지역은 밀양 52% 가덕도 43%, 울산의 경우 밀양 50.5% 가덕도 44.5%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즉 정리하면, 부산은 가덕도, 울산은 가덕도와 밀양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경남은 밀양이 높게 나왔다.

하지만 〈每日新聞〉은 이 결과에 대해 "경남 · 울산 주민도 밀양 더 선호"라고 해석하고, 1면 기사제목으로 편집했다.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지역사회에 유리하게 해석, 편집한 〈每日新聞〉의 보도 태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每日新聞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每日新聞 2011년 1월 25일자〉

"경남 · 울산 주민도 밀양 더 선호"
부산상의 여론조사 자승자박… '가덕도 지지' 억지주장 또 입증

부산 측이 최근 실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여론조사에서도 경남, 울산 지역 주민들은 가덕도보다 경남 밀양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후보지로 가덕도를 고집하고 있는 부산을 제외하고 경남과 울산 주민들이 밀양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3월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KM)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부산(400명), 울산(400명), 경남(200명) 등 이른바 부 · 울 · 경 지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부산상의가 주도해 부산 측의 의도를 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경남과 울산이 가덕도를 선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온 부산 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지역에서는 밀양 하남이 더 좋다는 응답이 52.0%로 나타났고, 가덕도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43.0%에 그쳤다. 울산의 경우는 밀양 하남을 선호하는 응답이 50.5%로, 가덕도(45.0%)보다 높았다.

부산의 경우 75.0%가 가덕도를 선호했지만 밀양을 지지하는 주민도 19.0%나 됐다.

한편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부 · 울 · 경 주민들도 응답자의 반 이상인 51.5%가 '전문가 의견'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국가의 공항관련 계획'(32.8%), '정치적 판단'(11.3%) 순이었다. 이는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4개 시 · 도가 요구해온 대로 신공항 건설이 정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항의 최적 입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종 입지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부울경 주민들도 '정부 발표대로 오는 3월까지'란 응답이 58.2%로 높게 나타나 신공항에 대한 열망과 함께 입지선정

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지연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2-② 每日新聞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현재 후보지로 경남 밀양을 요구하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과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상의가 조사한 신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영남권에서 많은 관심을 일으키는 사안이었습니다. 가덕도가 아니면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부산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과 인접한 경남, 울산이 가덕도 보다는 경남 밀양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신문사로서는 당연히 기사화할 내용입니다.

경남도민의 여론조사는 오차범위(밀양 52%, 가덕도43%)를 넘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고 다만 울산(밀양 50.5%, 가덕도 44.5%)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여서 다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부산 측은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김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화산을 절개해야 한다는 등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밀양에 대해 사실과 다른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측은 본사의 기사가 나갈 때마다 부산시와 각 기관이 반박하는 글을 보내고 전화를 해 옵니다. 이런데도 이번 기사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공항이 영남권 발전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밀양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4개 시 · 도의 염원에 비춰 비록 오차범위 이내지만 밀양이 앞선다면 어느 언론사라도 기사화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사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하는 지역 간 첨예한 대립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귀 위원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기사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지난 1월 24일자 부산일보가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每日新聞이 4개 시 · 도(대구 경북 경남 울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보도하고 있다며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이에 대해 每日新聞은 경남 밀양을 요구하는 대구, 경북, 경남, 울산과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일보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남, 울산이 가덕도보다 경남 밀양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비록 오차범위 이내라도 지역 신문사로서는 당연히 기사화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4일자 부산일보가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명시한 표본오차범위(±3.1%)와 신뢰도(95%)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울산지역의 여론은 밀양(50.5%)과 가덕도(44.5%)가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기사는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여론 분석의 중요한 척도인 표본오차범위와 신뢰수준을 밝히지도 않은 채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경남 · 울산 주민도 밀양 더 선호”라고 제목으로까지 편집하였는데 이는 특정 지역민의 희망을 반영한 과장기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6 독자불만처리
환경일보 발행인 임 병 찬

〈 주 문 〉

환경일보 2010년 12월 20일자 18면 「"외지인은 남의 마을에 간섭 말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환경일보 2010년 12월 20일자 18면 「"외지인은 남의 마을에 간섭말라"」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주민 70%가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으로 거짓을 사실처럼 꾸민 허위보도이자, 50%가 안 되는 찬성 여론을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한 과장 보도임. 또한, 찬성의 통계수치를 잘못 보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반대를 하는 주민이 극히 일부인 것처럼 허위, 과장보도를 한 것도 모자라 반대하는 주민이나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담지 않은 전형적인 편파보도에 해당함.

또한 마을 대표성이 없는 사람의 인터뷰를 마치 전체 주민의 의견인 양 보도함으로써 거짓을 사실처럼 꾸미고 사실을 그릇되게 호도함. 뿐만 아니라 불법 · 편법을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이유 없이 '이간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

기사를 작성한 이정은 기자는 환경일보 객원기자로 등록돼 있는 자로 이메일 주소가 webmaster로 돼 있는 점과 환경일보 강원지역본부가 있는 점으로 미뤄 객원기자 신분으로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

진실을 알리고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와 같이 근거 없고 일방

적인 편파 · 허위 · 과장 보도를 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인용 등을 써 가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음. 이러한 막가파식 저널리즘이 용인된다면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한 지역 또는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반드시 정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환경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환경일보 2010년 12월 20일자 18면〉

"외지인은 남의 마을에 간섭 말라"
골프장 건설 관련 타 지역민들이 이간질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주민 70% 찬성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 일원에 18홀 구모의 대중골프장이 허가 과정에서 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반대로 구학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구학리 주민들고 청 · 장년회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청 · 장년회 결성해 타 지역 대응

청 · 장년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구학리 청 장년회 주진위원장을 지난 14일에 만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청장년회 결성 동기에 대해 위원장은 골프장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도 반대했었다 면서 "그러나 구학리 사람도 아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큰소리 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다 못해 청 · 장년회 결성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도시에 사업차 나가 있다가 동네에 다시 들어와 보니 동네가 어

수선하고 주민들간 화합도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앞으로 구학리가 사포닌 테마 관광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학리 청년회는 다른 동네 사람이 자꾸 우리 동네에 와서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동네 노인들을 현혹시켜 시청 가서 사위를 하게 만드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테마관광 마을로 발전시킬 것

구학리 청 · 장년회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구학리 주민의 70%는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의 반대에 대해 추진위는 "구학리 주민이 일부 극소수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주민이 우리 동네에 와서 자꾸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장은 "당해도 우리가 당하고 이익을 챙겨도 우리가 챙길 것이라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 동네의 발전을 위해 구학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골프장이 들어오면 구학리에 사포닌 테마 관광마을이 조성되고 스키장, 축구장, 등산코스 등 다양한 스포츠시설과 장뇌삼, 더덕을 심어 구학리가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폐교가 된 마을 초등학교를 구학리에서 매입해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골프장에 오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남는 건물은 노인정, 마을회관, 민박 등 관광 테마마을로 조성할 것"이라며 마을 발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은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제천시의 한방약초 재배단지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테마관광 마을 만들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 체험과 숙식, 관광을 결합한 마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외지인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들어와 간섭하지 말아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2-② 환경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주민의 70%라고 한 것은 구학리 '원주민' 만의 통계이며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청장년회가 대표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아울러 '청장년회에 따르면'이라는 표현과 '알려졌다', '주장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제보자의 주장임을 밝혔음.

불만을 제기한 측이 가지고 있는 서명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며 객관성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후 이에 대한 객관성이 검증된다면 보도에 반영할 용의가 있음.

수년 간에 걸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은 널리 알려졌으나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를 게재했으며 이에 대한 '편파' 운운은 불합리한 판단으로 보여짐. 제보자에 따르면 반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알려왔으며 실제 인터뷰 중 여러 명의 주민과 대화를 통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음.

반대 측은 불법 · 편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 환경청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임.

환경일보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반대편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편집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이는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이들뿐 아니라 반대편에 선 이들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반대측에서 건설반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통해 주장을 개진하거나 반대측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음.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환경일보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 일대의 대중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편파 · 허위 · 과장 보도를 하고 있다며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건이다.

기사는 리드 부분에서부터 "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간섭과 반대로 구학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식의 표현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도 '외지인', '타 지역 주민', '다른 동네 사람'이라는 막연한 표현만 사용했을 뿐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구학리 주민 70~80%가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고 있고 골프장이 들어서면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데 외지인과 지역단체의 반대로 골프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기사는 또한 "구학리 청년회는 '다른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동네 노인들을 현혹시켜 시청 가서 시위를 하게 만드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주민의 반대에 대해 추진위는 '구학리 주민이 일부 극소수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 주민이 우리 동네에 와서 자꾸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등 골프장 건설 찬반 양측의 주장을 균등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찬성하는 쪽 일방의 주장만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제목에서도 "외지인은 남의 마을에 간섭 말라", "골프장 건설 관련 타 지역민들이 이간질"이라는 편견 가득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기사는 골프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법적 절차나 행정상의 이유 등 제3의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가능성은 배제한 채, '일부 지역단체와 외지인의 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을 골프장 건설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으로 전제하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대표 단체인 시민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이나 반론을 전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신문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역 주민이나 단체 간의 찬반 논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극히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도함으로써 어느 일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항(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1 독자불만처리
영남일보 발행인 배 성 로

〈주 문〉

영남일보 2011년 2월 15일자 1면「'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 2월 22일자 1면「"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2011년 2월 15일자 1면「'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 2월 22일자 1면「"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영남일보는 밀양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라고 제목을 편집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데도 마치 볼트가 '밀양에 신공항이 없어서 피곤하다'는 것처럼 편집하고 있다.

경상북도 신청사 수주가 대우건설 쪽으로 결정나자, 영남일보는 2월 22일자 1면에 〈"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따옴표 속에 적힌 내용 〈"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과 중간제목 〈'지역업체 대놓고 소외'에 비난

여론〉이라는 내용은 본문에서도 찾을 수 없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영남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남일보 2011년 2월 15일자 1면〉

'밀양신공항' 이래서 필요하다 5
'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
세계육상 참가 해외선수들 인천→대구 이동 불만토로

지난해 5월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당시 대구 도착 이후 만 하루 동안 숙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전부 룸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는 다음날에야 가벼운 조깅으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왜 그랬을까. 볼트는 "너무 피곤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시킬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경기장인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해 경기 인프라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별 탈 없이 구축되고 있다. 육상에 대한 관심을 포함, 대회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12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직위원회가 가장 아쉬워하고 불편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국제공항이다. 조직위가 지정한 공식공항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 두 곳이다. 하지만 두 공항 모두 국제선이 변변찮아 유럽이나 미국 · 중남미 선수들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의 아쉬움과 불편은 여기서 출발한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불필요하거나 최소화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직위와 대한항공이 공식후원사 협약을 맺었다. 필요한 만큼

의 충분한 증편운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차선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에서 IAAF측이 우려와 불만을 표시한 것도 항공수송 분야였다. IAAF는 "역대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한 나라 중 한국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항공편을 포함, 인천공항에서 대구에 도착하는 교통수단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상당수 대책마련을 주문할 정도였다.

조직위 관계자는 "대구 인근에 관문공항이 있었으면 하지않아도 될 업무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행시간과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컨디션이 떨어지기 십상이고, 결과마저 나쁘다면 과연 대구에 대해 좋은 인상과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영남일보 2011년 2월 22일자 1면〉

'지역업체 소외' 경북도 신청사 수주 포스코건설 탈락 파장
"포스코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을 것"
'지역업체 대놓고 소외'에 비난 여론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건설이 경북도청 및 경북도의회 신청사 공사 수주전에서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자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큰 공사에 그 지역 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업체가 공사물량이 없는 지방에 계속 본사를 두고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지역 공사에서 배제된 지역업체**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청과 경북도의회 신청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결정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종합점수에서 최고점수인 99.20점(설계 69.20점, 가격 30점)을 얻었다.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95.69점(설계 65.74점, 가격 29.95점),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은 92.27점(설계 62.28점, 가격 29.99점)을 각각 얻는데 그쳐 탈락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참여지분 50%)을 비롯해 풍림산업(서울) · 세원건설(구미) · 우석종합건설(경주) · 동일건설(문경) · 주일건설(경산) · 진영종합건설(포항) 등 7개 업체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한 지역민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사업자 선정에 대해 공정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특정업체에 점수 몰아준 심의위원**

이번 경북도청사 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건축계획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경북 모 대학교 K교수는 대우건설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 채점 집계표에 따르면 K교수는 대우건설에 37.30점을 배점한 반면,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에는 4.6점, 4.7점이나 낮은 32.70점과 32.60점을 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포스코건설은 결국 K교수의 배점차를 극복하지 못해 대우건설과 최종점수에서 3.51점 뒤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탈락업체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선정에) 떨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하다.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 **지역업체 끌어주는 대구 기관들**

대구시는 2009년 발주한 건설공사(1조2천36억원)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 이상(7천174억원)으로 높였다.

이 같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대구시의 노력 덕분'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구 업체는 화성

산업(45위)이 유일할 정도로 지역 대형업체가 부족하지만, 대구시가 분할발주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도운 결과라는 것이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 공사를 비롯한 각종 관급 계약 참가 자격을 대구지역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총 공사비 1천252억원의 시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대구업체로 제한하고,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정해 대구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② 영남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 2011년 2월 15일자 1면 「'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

해당 기사는 밀양신공항 이래서 꼭 필요하다 시리즈 기사로, 스포츠 분야에서 공항이 꼭 필요한 이유를 다룬 내용입니다.

우사인 볼트는 지난해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대구로 이동하면서 쌓인 피로 때문에 만 하루 동안 숙소 호텔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부재에 따른 이동 시간, 거리, 방법 등이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선수들이 이동할 때 겪는 불편과 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제목을 뽑게 됐습니다.

▣ 2월 22일자 1면 「"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지적된 제목은 경상북도의 지역건설업체 소외시키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반드시 본문 중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야 한다'는 편집룰은 없습니다. 지역업체 포스코 건설의 정서는 제목대로 경상북도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덧붙여 이 기사보도와 동양종

합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 2월 15일자 「'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 제하의 기사는 〈'밀양 신공항' 이래서 꼭 필요하다〉 기획기사 시리즈 중 하나이다.

기사는 밀양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상당수 참가자들이 이용할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의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 우사인 볼트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5월 2010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당시 대구 도착 이후 만 하루 동안 숙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전부 룸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는 다음날에야 가벼운 조깅으로 컨디션을 조정했다. 왜 그랬을까. 볼트는 "너무 피곤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라는 부분 밖에 없는데도 우사인 볼트가 대구에 대해 부정적인 심경을 드러낸 것처럼 확대 해석하여 〈'인간탄환' 볼트도 대구라 하니 인상부터 쓰더라〉라고 제목을 달았다.

대구에 관문공항이 없어 우사인 볼트가 대구까지 오는 동안 불편을 겪었을 것을 추측할 순 있겠으나 그러한 개연성만으로 위와 같은 제목을 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2월 22일자 「"포스코 건설이 서울로 옮겨 간다고 해도 경북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제하의 기사는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건설이 경북도청 및 경북도 의회 신청사 공사 수주전에서 탈락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지역이익 대변이 지방신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감안하면 지방 신문이 지역기업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탈락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겠으나 기사 본문에는 전혀 없는 내용으로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담아 위와 같이 제목을 단 편집은 독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기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 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2 독자불만처리 대구신문 발행인 김 경 발

〈주 문〉

대구신문 2011년 2월 7일자 5면「"도심속 작은 공원…친환경 웰빙생활 가능"」, 2월 11일자 7면「"친환경 웰빙 즐기자" 삼덕 청아람, 분양문의 폭주」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대구신문 2011년 2월 7일자 5면「"도심속 작은 공원…친환경 웰빙생활 가능"」, 2월 11일자 7면「"친환경 웰빙 즐기자" 삼덕 청아람, 분양문의 폭주」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장점 일변도로 '삼덕 청아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팸플릿을 연상시키는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3조 ②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대구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구신문 2011년 2월 7일자 5면〉

"도심 속 작은 공원' … 친환경 웰빙생활 가능"

교통, 교육, 문화, 쇼핑, 공원까지 최고의 입지조건 갖춰
대구도시공사 삼덕청아람
11일 주택전시관 개관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가 2011년 대구주택시장에 첫 출사표를 던진다. 그것도 대구의 심장인 중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35층짜리 중소형 대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오는 11일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 병원 옆에 위치한 삼덕청아람아파트의 주택전시관(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을 대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할 삼덕청아람 아파트는 대구 시내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개 전부터 관심을 갖고 가격, 입주시기, 평형 등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이번 분양을 지역 주택 시장 회복의 첫 단초로 삼겠다는 각오로 100% 분양 자신감에 넘쳐 있는 상태다.

도시공사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듯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지역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중소형을 중심으로 전세물량 품귀로 전세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다 1월 들어서는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단지도 나오고 있다.

주택업체들은 이런 시장 경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그간 미분양 아파트에 제공하던 각 종 할인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는 등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3천967건으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입주물량이 작년의 절반수준인 5천 가구로 10년만에 최소규모로 급감한데다, 2012년에는 3천 가구로 줄어 2013년에는 공급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삼덕청아람 등 올해 공급되는 단지들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대구 심장 중구의 35층 랜드마크, 삼덕청아람

대구도시공사가 올해 대구시민들에게 야심차게 선보이는 삼덕 청아람의 자

랑은 총체적 최고 입지조건이다.

지하철2호선 경북대학교병원역과 풍부한 시내버스노선을 이용해 대구시내 어느 곳이든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 5분 거리에 위치한 동성로에서 마음껏 누리는 쇼핑과 문화시설, 경북대학교 사대부속초,중,고등학교 및 시립중앙도서관이 인접한 수준 높은 교육여건, 단지 내 근린공원과 연결된 신천강변, 국채보상공원, 2.28공원 등에서 누리는 웰빙생활 등 최고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대구의 심장, 중구의 35층 랜드 마크로써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공사에 착공한 삼덕 청아람은 30년 전통의 건설강호 계룡건설 컨소시엄(계룡건설, 화성산업, 서한, 국태종합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준공은 2013년 4월, 입주는 같은 해 6월 예정이다.

삼덕청아람의 최대 강점은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형으로만 이뤄진데다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단지라는 점이다. 전용면적 39㎡ 60세대, 59㎡ 275세대, 84㎡ 395세대 등 총 730세대가 중소형이다.

◈ 친환경 웰빙 생활 최적

삼덕청아람은 전세대가 남서, 남동향으로 배치되어 채광과 통풍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고 단지 중앙에 광장을 배치하고 메타세콰이어 숲과 연못, 놀이터 등 입주민들만의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 속에서 친환경 웰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초고속 정보통신1등급 예비인증,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AA등급 기준적용,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2등급) 취득,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 예비인증, 주택성능등급인증 등 각 종 전문기관에서 첨단 아파트로 인정을 받았다.

세대 내부는 삼덕 청아람만의 우수성이 더욱 돋보인다.

세대 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제를 사용하여 층간소음뿐 아니라 단열효과도 극대화 했다.

개별보일러 및 실별 온도조절 제어장치 설치,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벽지, 마루판, 페인트 사용, 전 세대 음식물 건조기 설치, 주방수전에

절수형 풋밸브(84㎡형)설치 등 세심한 부분까지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생활편의성을 고려했다.

도시공사 윤성식사장은 "주택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분양시장의 포문을 열게 돼 잘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도시공사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 올해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주택업체들까지도 승승장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39㎡ 60세대와 59㎡ 275세대는 5년 공공임대

삼덕 청아람은 전용 39㎡ 60세대와 59㎡ 275세대는 5년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39㎡는 보증금 3천350만 원대에 월 임대료 32만8천 원대, 59㎡는 보증금6천40만 원대에 월 임대료 43만9천 원대다.

일반 분양되는 84㎡의 분양가는 최상층 기준 2억9천700만 원대로 일부 자재에 대해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1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일 주택전시관 개관, 16일 1순위, 17일 3순위를 접수받으며 무순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택전시관 또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24일 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발표하며 3월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주택전시관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삼덕청아람 모델하우스는 지하철2호선 대실역에 위치한 청아람 갤러리에 마련되며 삼덕청아람 공급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홈페이지 (www.duco.or.kr)와 콜센터 (053-350-0301~3), 모델하우스 (053-359-3660~2)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기자kingcj123@idaegu.co.kr

〈대구신문 2011년 2월 11일자 7면〉

"친환경 웰빙 즐기자" 삼덕청아람, 분양문의 폭주
대구도시공사, 오늘 주택전시관 공개

하루 300건 문의… 주택시장 부흥 기대

올해 지역 주택시장 분양의 첫 물꼬를 틀 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의 삼덕 청아람의 11일 주택전시관 공개를 앞두고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덕 청아람은 대구의 중심지 중구에 전용면적 39㎡ 60세대, 59㎡ 275세대, 84㎡ 395세대 등 총 730세대규모의 35층짜리 중소형 대단지다.

지역 분양시장업계의 첫 단초가 될 이번 삼덕 청아람 대공개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올 주목받는 단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구 동성로에 인접한 최고의 입지조건과 화성산업 서한과 계룡건설, 국태종합건설 등 공신력 있는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는 점이 강점이다.

아파트 내부와 외부가 한마디로 친환경 웰빙 생활을 구가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돼 삼덕 청아람만의 우수성이 특히 돋보인다.

이로 인해 개관을 앞둔 대구도시공사에는 하루 평균 300여명의 문의전화가 분양센터에 이어지고 있고 도시공사 각 부서에도 전화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분양센터관계자들은 주택시장 부흥의 신호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와 자신감에 넘쳐 있는 상태다.

대구도시공사 최효종 주택분양센터장은 "예상외로 많은 실수요자들이 입주시기, 가격 등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수요자들의 문의숫자는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주물량이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10년 만에 최소규모로 급감한데다 중소형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없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도시공사로서의 신뢰성과 청아람만의 바늘구멍 애로사항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생활편의성으로 정면 승부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덕 청아람은 전용 39㎡ 60세대와 59㎡ 275세대는 5년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39㎡는 보증금 3천350만 원대에 월 임대료 32만8천 원대, 59㎡는 보증금 6천40만 원대에 월 임대료 43만9천 원대다.

일반 분양되는 84㎡의 분양가는 최상층 기준 2억9천700만 원대로 일부 자재에 대해서 마이너스옵션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1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일 주택전시관 개관, 16일 1순위, 17일 3순위를 접수받으며 무순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주택전시관 또는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당첨자는 오는 24일 도시공사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발표하며 3월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주택전시관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삼덕청아람 모델하우스는 지하철2호선 대실역에 위치한 청아람 갤러리에 마련되며 삼덕청아람 공급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 홈페이지 (www.duco.or.kr)와 콜센터 (053-350-0301~3), 모델하우스 (053-359-3660~2)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기자kingcj123@idaegu.co.kr

2-② 대구신문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삼덕 청아람' 아파트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위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도심속 작은 공원…친환경 웰빙생활 가능"」, 「"친환경 웰빙 즐기자" 삼덕 청아람, 분양문의 폭주」 등 기업 홍보물을 연상케 할 정도의 판촉용 표현으로 편집되었다.

또한 위 기사는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해당 아파트의 장 · 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모델하우스의 문의전화번호까지 곁들여 가며 입지, 조경, 내부 설비, 디자인 등에 대해 장점 위주의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 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 2011-1-13 독자불만처리
每日新聞 발행인 이 창 영

〈주 문〉

每日新聞 2011년 2월 9일자 17면「해외여행 간다고 상사 눈치 볼 필요없다」, 2월 23일자 17면「화려한 명소 많아요, 숨은 볼거리는 더 많죠」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每日新聞 2011년 2월 9일자 17면「해외여행 간다고 상사 눈치 볼 필요없다」, 2월 23일자 17면「화려한 명소 많아요, 숨은 볼거리는 더 많죠」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여행박사 홍보팀장이 일본의 여행코스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면에 걸쳐 홍보성으로 편집된 이 기사는 〈여행박사〉에서 제공하는 여행상품소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끝부분에는 여행박사와 TNT에서 제공하는 여행코스 요금, 출발시간, 그리고 자세한 전화번호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일본여행상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 시리즈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每日新聞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每日新聞 2011년 2월 9일자〉

일본 구석구석 들여다보기〈3〉금요일에 떠나는 2박 3일 후쿠오카
해외여행 간다고 상사 눈치 볼 필요없다

"남들 일할 때 노는 재미란? 그것도 해외에서."

직장인들의 평일 휴가는 꿀맛 중의 꿀맛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전 고민은 떠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직장에서의 휴가 받기, 여행경비가 발목을 잡는다. 특히 여행 시즌에 떠나려고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며칠씩 휴가를 내려니 상사의 눈치도 보인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참에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지를 정해봤다.

◆ 금요일 휴가로 2박 3일 후쿠오카 여행

부산에서 고속선으로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선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 후쿠오카까지 가는 시간이다. 후쿠오카는 이제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닌 식도락과 쇼핑의 도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부산을 떠나서, 도착하고 보니 하카타항이다. 예전의 후쿠오카시와 하카타시가 합쳐져 새로운 도시명에 대한 회의가 벌어졌고 처음에는 하카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의 불만으로 현재의 후쿠오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다. 그래서 상인들이 거주하던 하카타시의 이름은 공산품과 부두, 공항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 남자들의 로망, 전자제품

하카타역에 위치한 요도바시는 작은 용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주방기구부터 고가의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남자들만 방문한 '요도바시 카메라'(전자상가)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층을 꼼꼼히 둘러보고 나오는 데 3시간이 소요됐다. 식당까지 허투루 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도바시 카메라에 입점해 있는 100엔 스시집과 튀김 정식집은 일본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 텐진, 후쿠오카 패션을 거닐다

텐진은 하카타역에서 약 6분 거리에 있는 후쿠오카 최대의 번화가다. 특히, 400m에 이르는 지하상가에는 150여 개의 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득한 곳이다. 지상에는 다이마루, 미츠코시 백화점이 있어 후쿠오카 패션을 거리에서 느낄 수 있다.

후쿠오카의 패션은 자기다움이다. 부조화스러움 속에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그들의 모습이다. 거부할 수 없는 패션이 사뭇 정겨움마저 느껴진다.

◆ 도시 속의 도시, 커널시티

180m의 운하를 따라 호텔, 쇼핑점, 극장, 식당들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다. 1996년 완공되어 인공운하가 쇼핑몰 중앙부를 흐르고 빛, 바람, 비 등의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5층에 자리 잡고 있는 라멘 스타디움은 일본 전국의 유명한 라멘집 8점포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커널시티 입구를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이다. 현해탄을 건너 후쿠오카에서 만난 한국인의 손끝 작품이 몸속에서 뜨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 야타이에서 만난 돈코츠 라멘의 진검승부

나카스의 밤거리는 잔잔한 파도 위의 오징어배를 연상시킨다. 일본인 특유의 조용함이 밤이 되면 나카스의 야타이(포장마차)에서 화려함으로 바뀌는 듯하다. 보통 오후 6~7시 정도에 문을 열어 오전 3~4시까지 영업을 한다. 나카스강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야타이의 주메뉴는 오뎅, 야끼소바, 우동, 꼬치, 라멘 등이 있다.

'돈코츠 라멘은 반드시 야타이에서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은 함께 동행한 이들의 이구동성이었다. 시간과 정성이 함께 끓여진 듯한 걸쭉한 사골 국물은 처음 일본 라멘을 접하는 사람을 의아하게 만든다. 500~1천엔의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일본인과는 달리 면을 다 먹은 후, 공기밥을 찾는 모습에서 '역시 한국인이구나!'라고 다시 느껴진다.

포장마차의 실내는 물론 실외 테이블에도 빼곡히 자리 잡은 사람들의 왁자지껄함, 한국의 포장마차와 많이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 재미와 흥겨움이 묻어나는 것은 왜일까.

옆 테이블의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강물에 비친 나카스의 야경과 포장마차는 하카타의 절정이다.

여행박사 심원보 홍보팀장 053)421-9989 〈www.tourbaksa.com〉

▶ 상품 정보

여행박사에서 부산~하카타항 2박 3일 고속선 자유여행. 후쿠오카, 유후인, 벳푸 관광을 하고 하카타역 근처 선루트 호텔에서 2박. 요금은 19만 9천원(12일), 그 외 매일 출발 25만 5천원부터. TNT 투어에서 부산~하카타항 2박 3일 카멜리아 자유여행. 카멜리아 선박에서 1박, 피콜로 하카타 민박 1박. 요금은 매일 출발 14만 5천원부터. 호텔로 변경 가능하며 추가요금은 5천~3만원. TNT 투어 070-8672-6441.

〈每日新聞 2011년 2월 9일자〉

일본 구석구석 들여다보기〈4〉일본의 심장, 도쿄 베스트 7
화려한 명소 많아요, 숨은 볼거리는 더 많죠

'일본의 심장, 도쿄를 만끽하라!'

일본 여행 하면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에 온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개성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번화가와 마천루 빌딩 숲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만큼 화려하면서 역동적인 곳, 도쿄.

스트레스가 가득 쌓였을 때,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듯 가슴속의 열을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으로 떠나고 싶어졌다.

'TOKYO!' 일본의 수도다. 한국의 특별시에 해당하는 도쿄도(東京都)는 인구 1천300만 명을 넘어섰고, 중심지역인 23구의 인구는 900만 명에 가까워졌

다. 도쿄는 모험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도시다.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설레는 모양새가 여느 여행과 다르다. 봐야 할 곳이 많아서 구체적인 일정을 세우지 않으면 관광지를 다 둘러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육체적인 피로는 다음 일정까지 영향을 준다.

일본의 심장, 도쿄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 10곳을 추천한다.

① 신주쿠

신주쿠는 도쿄 제일의 번화가로 신주쿠 역을 중심으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고층건물이 즐비한 오피스 지구 니시(西) 신주쿠와 가부키쵸를 중심으로 한 쇼핑의 천국 히가시(東) 신주쿠. 그리고 아래쪽으로 신주쿠 교엔과 다카시마야 타임스퀘어가 자리한 미나미(南) 신주쿠가 있다.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는 히가시(東) 신주쿠의 가부키쵸를 방문하면 된다. 도쿄에 새로운 스팟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신주쿠는 도쿄 관광의 1순위를 차지하는 최대 중심지다.

② 하라주쿠

신주쿠와 함께 도쿄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쇼핑의 동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독특한 디자인의 점포들이 많다. 다케시타도리(竹下通り)의 거친 화려함, 하라주쿠도리의 멋스러움, 오모테산도의 명품거리뿐 아니라 구석구석 숨겨진 노천카페의 즐거움이 있고, 개성 가득한 패션숍이 많은 캣츠 스트리트까지 각양각색의 아이템과 상점들로 가득하다.

한국 연예인들의 쇼핑하는 모습이 캣츠 스트리트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느끼거나 볼 수 없는 감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나무가 많아 도쿄의 허파 메이지진구에서 한적한 가로수 길을 걷는 것도 여행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다.

③ 시부야

최첨단 유행의 발산지이자 소비의 거리 시부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도쿄 패션의 선두주자이자 시부야 패션의 일번지인 109쇼핑몰을 필두로 도큐 백화점, 세이부 백화점, 파르코, 마루이시티 등의 패션몰과 로프트나 도큐핸즈와 같은 패션 잡화점, 그리고 유명 패션 브랜드와 중고 옷가게가 곳곳에 혼재해 있다.

④ 오다이바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다이바는 미래 도시 도쿄의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는 유리카모메(무인 모노레일)를 타고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영화에서 보던 메트로폴리스의 이미지 그대로다. 후지 TV 본사, 아쿠아시티(쇼핑몰), 도쿄 빅사이트(동양최대의 전시장), 오오에도 온천 등 예쁘고 아기자기한 명소가 몰려 있어 일일 데이트 코스로 더할 나위 없는 곳이다.

⑤ 아사쿠사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거리로 센소지로 향하는 참배길이 점점 번창해 오늘날의 아사쿠사 거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상징과도 같은 가미나리몬(雷門)과 90개가 넘는 점포들이 늘어선 나카미세도리(仲店通り),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 센소지 등 일본 전통 볼거리로 가득 차 있어 도쿄를 처음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들르는 곳 중의 하나다.

⑥ 다이칸야마

도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뽑히는 다이칸야마. 인근 시부야나 하라주쿠에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각종 아이템이 많다면, 다이칸야마에는 차분하고 심플한 이미지의 가게와 점포들이 많은 편이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가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지겹지 않은 곳이다. 여자들이 도쿄를 여행할 때 빼놓지 않는 코스이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잡지화보 촬영 인기 지역이다.

⑦ 시모키타자와

최근 도쿄 사진집을 낸 배우 배두나가 뽑은 최고의 도쿄 로망 시모키타자와. 시모키타자와 역을 중심으로 남쪽 출구에는 잡화와 음식점이, 북쪽 출구에는 카페와 의류점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다. 카페 골목길을 걷고 있으면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만큼 정겨움이 가득한 곳이다. 유모차를 직접 끌고 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곳이다.

위에 소개한 베스트7 지역 외에도 도쿄의 가장 서민적인 동네 우에노와 중년의 느낌이 가득한 접대명소 긴자, 그리고 도쿄 도심 재개발 사업의 결정판인 롯폰기 힐즈 등도 구경하기 좋은 장소다.

여행박사 심원보 홍보팀장, 053)421-9989, www.tourbaksa.com

◆ **여행정보**

여행박사에서 일본항공으로 부산~나리타 공항 2박 3일 패키지 여행. 요코하마, 하코네 또는 디즈니랜드, 아사쿠사, 오다이바관광을 하고 니시카사이 호텔에서 2박. 요금은 86만5천원부터(화 · 목 · 금 · 토요일 출발). 동대구-구포역 간의 무궁화호와 김해공항-동대구역 간의 리무진 비용 포함.

TNT투어에서 부산~시즈오카 공항 3박 4일 패키지 여행. 요금은 85만9천원, 매주 토요일 출발. 황거, 메이지 신궁, 에비스 맥주 기념관 등. TNT투어 070-8672-6441.

2-② 每日新聞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 일본 구석구석보기 게재 경위

매일신문은 보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여행 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행지면 중 1개 지면을 외부전문가(여행가, 여행칼럼니스트 등)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독자(제보자)가 지적한 '일본 구석구석 보기' 기사가 실린 지면의 경우 이전까지 '유지성의 오지레이스' 와 'Joey & Leah의 좌충우돌 온누리 탐험기'를 격주로 게재했습니다. 일본 구석구석 보기는 유지성의 오

지레이스의 후속으로 기획됐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필진을 섭외하던 중 일본 여행 전문 여행사인 여행박사에 원고를 부탁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대상 국가로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그 동안 일본여행에 대한 단편적인 기사는 많이 보도됐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기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기사 끝부분 여행박사 및 TNT 전화번호, 상품소개 관련

특별히 여행사를 광고해 주고자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매일신문이 이번 기사와 관련해 여행사로부터 광고를 비롯한 어떤 협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기사 끝부분에 일본 여행 상품을 소개했는데, 이 역시 광고나 광고성 대가를 받고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독자에게 실속 상품을 소개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특정 여행사의 홍보가 됐다는 독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 기사의 광고성 관련

독자는 이 기사들이 홍보성으로 편집됐고, 일본여행상품에 가깝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여행지에 대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필자가 여행사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취재 여건상 여행기사,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기자가 매번 여행을 다녀오고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언론사들은 해외 여행 기사를 외부 필진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자의 지적은 여행 기사를 쓰는 사람이 여행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독자의 지적처럼 여행업 종사자가 직접 기사를 작성할 경우 특정업체 홍보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문제작에 있어 이런 점을 주의 깊게 고려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每日新聞이 정기적으로 싣고 있는 여행 섹션 중 2011년 2월 9일자, 2월 23일자 '일본 구석구석 들여다보기' 제하의 일본 여행지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每日新聞은 의견표명서를 통해, 위 기사는 독자들에게 일본 여행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것일 뿐 여행사로부터 광고를 비롯한 어떤 협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여행지의 미비점이나 여행자가 경계 · 유념해야 할 정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기사 뒷부분에 '여행정보' 난을 만들어 여행사 이름, 전화번호, 여행상품정보, 이용 가격 등을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 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 독자불만처리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주 문〉

경북매일 2011년 4월 5일자 2면「한나라 "정부, 독도 대응 미온적" 쓴소리」, 3면「지역 말 산업 인프라 활성화 '구슬땀'」, 7일자 3면「강석호 의원,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 11일자 3면「"삼척 가스공사 책임 미루지 말아야"」, 14일자 1면「"구제역 2차 보상금 조속한 지급을"」, 21일자 2면「"농협, 관리부실이 '전산 장애' 초래"」, 27일자 1면「"영덕 영양에 농공단지 신규 허가」, 28일자 2면「강석호 의원, 영덕자유총연맹 축사」, 29일자 3면「강석호 의원, 공

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관련 간담회 개최」 제하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 제기를 '기각'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경북매일 2011년 4월 5일자 2면 「한나라 "정부, 독도 대응 미온적" 쓴소리」, 3면 「지역 말 산업 인프라 활성화 '구슬땀'」, 7일자 3면 「강석호 의원,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 11일자 3면 「"삼척 가스공사 책임 미루지 말아야"」, 14일자 1면 「"구제역 2차 보상금 조속한 지급을"」, 21일자 2면 「"농협, 관리부실이 '전산장애' 초래"」, 27일자 1면 「"영덕 영양에 농공단지 신규 허가」, 28일자 2면 「강석호 의원, 영덕자유총연맹 축사」, 29일자 3면 「강석호 의원, 공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관련 간담회 개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경북매일〉은 포항에 본사를 둔 삼일그룹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고, 이 그룹의 부회장인 강석호 의원이 실질적 사주다.

2008년 총선부터 지금까지 〈경북매일〉은 자신의 사주인 강석호 의원을 지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띄워왔다. 4월 한 달 동안에도 총 11건의 기사에서 강석호 의원을 띄우고 있다.

언론사의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부각시킨 〈경북매일〉의 보도태도는 신문윤리강령 1조 언론의 자유 및 3조 언론의 독립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경북매일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북매일 2011년 4월 5일자 2면〉

한나라 "정부, 독도 대응 미온적" 쓴소리
독도 당정회의서 일관성 없는 정책 등 지적
'이 대통령, 독도 방문 건의' 고려도 제기돼

한나라당이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함께 "정부의 독도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석(경북 포항북) 한나라당 독도특위 위원장은 "마츠모토 다케아키 외무대신은 한국 정부의 독도 시설 설치가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망언을 했다"며 "일본의 전후 최대 위기라는 지진과 원전 위기 중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는 공존과 화해로 나가는 21세기 인류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천지개벽을 두 번 해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국회 독도특위 한나라당 간사도 "2008년부터 진행돼온 독도 관련 사업이 14개 있고 국회에 독도 관련 법안이 15개 계류 중"이라며 "올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고 독도의 실질적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결의하자"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강석호(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의원은 "관광객들이 독도에 들어갈 때도 정부 측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독도에 들어가면 외교문제가 비화되니 이달에 몇 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라'고 하는 등 정책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구상찬 의원은 "정부 측이 독도 헬기장 보강사업, 주민 숙소 사업 등에 대해 국회에 완료했다고 보고했는데 5월 중에나 완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작은 것 하나에도 솔직해야 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당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며 "독도의 날 지정 등을 청원했는데 외교통상부가 반대하는 등 정부의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독도 명칭이 잘못 표시돼 있는데 주미대사가 미국측에 항의하고 최소한 중립적인 표기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독도특위 위원들과 국회 독도특위 소속 한나라당 위원

들은 '일본은 망국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고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합동 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 국회는 독도 영유권 강화 관련 법률들을 우선 처리하고 ▲ 정부가 독도 영유권 강화 정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2011년 4월 5일자 3면〉

지역 말 산업 인프라 활성화 '구슬땀'
강석호 의원, 지자체 승마장 조성사업 적극 지원 촉구

속보= 경북도가 농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육성사업 국비 지원금을 전국에서 최고 수준(60억원)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말 산업 인프라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본지 4일자 3면 보도〉 가운데 강석호 국회의원〈사진〉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지원사업(마필산업 육성사업)으로 포항 7억5천만원 등 구미, 경주, 영천, 칠곡, 성주 등 6개 지자체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내년 초까지 승마시설을 건립한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농식품부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대학, 농업인, 비농업인 등에 승마시설, 사육 · 조련시설 및 말 구입비, 말 전용 경매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등 공공 승마시설은 15억원, 농업인 등 민간 승마시설은 5억원이 지원된다.

포항시 농축산과 승마장 T/F팀 관계자는 "말 산업 육성은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승마장 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돼 지역 말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강석호 의원의 활약이 있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가 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포함해 공공과 민간 승마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말 산업과 여가문화 활성화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국회 기간인 지난 달 8일 한국마사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자체의 승마장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 승마장 시설 과잉'이라는 지적과 달리 포항의 경우 1시간 30분 거리인 영천승마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시설 부족에 따른 도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와 울산, 대전 등 이미 설치된 공공 승마장의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으며 낡고 비규격화된 시설인 만큼 정부가 표준승마장 모델을 수립해 지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당시 질의에서 정부가 제4경마공원 입지를 영천으로 확정하고도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가량 지연돼 오는 2016년 3월 개장이 어렵게 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부와 공기업의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경북매일 2011년 4월 7일자 3면〉

강석호 의원, 울진 산불피해 현장 방문

강석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의원은 6일 "이돈구 산림청장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일대의 산불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 기성면 일대는 지난 3월 30일, 산불이 발생해 산림 44ha를 태우고, 가옥 12동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초 산불 발생 후 재발화되어 주민의 피해가 커졌

다"며 "봄철 산불대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성면 일대에 들어서는 산림헬기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장에게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통하여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임광원 울진군수에게는 산불로 인한 피해주민의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2011년 4월 11일자 3면〉

"삼척 · 가스공사 책임 미루지 말아야"

강석호 의원, 삼척 LNG기지건설 피해조사 촉구

삼척 LNG생산기지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열렸다.

간담회는 강석호〈사진〉 국회의원과 전찬걸 도의원, 가스공사 관계자,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 한나라당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어민들은 어업권피해 선지급 기준을 삼척시에서 위탁한 부경대 자료를 근거로 했다면 울진군에 삼척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지의 여부와 근거리에 위치한 울진 고포, 나곡 어촌계가 선지급 보상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지난 2월 어업피해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피해확산범위를 울진군 북면 고포와 나곡지역까지 포함해 용역 과업을 지시했는지와 부경대에서 수행한 가상피해규모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보상 자료를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울진지역도 피해지역에 포함돼 용역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해양대학은 삼척지역은 용역계약이 돼 조사를 실시했으나 울진지역 피해조사는 계약

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가스공사 측의 무성의한 답변을 질책했다.

강 의원은 "삼척시와 가스공사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울진 어민피해에 가스공사는 삼척시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울진군과 협의해 어민피해 용역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가스공사 측에 "빠른 시간내 어민보상문제와 피해용역조사 여부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한편, 지난 1월초부터 삼척 LNG생산기지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과 로프 등이 파도에 휩쓸려 울진 해안으로 남하해 울진지역 어장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가스공사는 지난 6일 울진지역 해역에서 건져 올린 부유물과 마대자루 등이 가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진군으로 발송했다.

〈경북매일 2011년 4월 14일자 1면〉

"구제역 2차 보상금 조속한 지급을"
미계량 살처분 가축 농민 위해 보상기분 빨리 정해야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등 농가경제에 엄청난 추가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특단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 사진) 의원은 13일, "전국의 구제역 살처분 축산 농가들이 2차 보상금의 조속한 지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린 농식품위 업무보고에서 유정복 장관을 상대로, "미계량 살처분 소에 대한 중량 기준을 명확히 정해 지자체에 시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지자체에 미계량 매몰을 종용하거나 용인한

만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정해 지자체와 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안동시와 영주시, 영양군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몰 대상 소와 돼지에 대해 몸무게를 계량하지 않고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정확한 체중을 바탕으로 농가별로 발병 지연 신고, 자체 소독 미이행 등을 파악해 20~60%의 보상금을 감액해야 하는 2차 보상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2차 보상에 대해 보여온 미온적인 태도는 살처분 확산 당시 구제역 방역의 최전선에 일선 지자체를 배치했던 상황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 표준체중 고시의 현실에 맞는 수정을 포함해 보상금이 조기 지급돼 축산농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에 따른 관광부문 피해규모 추정' 자료를 공개하고 "인천 · 광주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등 7개 지자체의 지난 1월 유료관광지 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39.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월 지자체 관광객 감소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광주가(94.2%)였으며 뒤를 이어 전북이(72.8%), 충북(30.1%), 경북(28.7%)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를 '2009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의 월별 관광 총량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천597억원의 관광소비지출이 감소했다"며 "2월까지 동일 비율을 적용할 경우 총 6천527억원의 국내관광객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관광지출이 줄어들면서 1조1130억원의 생산유발감소효과와 4천661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며 "고용부문에 미친 효과를 추정할 경우 연간 약 1만4천948명의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민연대 · 전국농협노조 등 농민 · 노동단체들은 지난 12일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구제역은 소 · 돼지 35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축산농민의 삶의 기

반을 앗아 갔다"며 "그러나 정부는 보상금을 삭감 · 차등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재기 의지마저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2011년 4월 21일자 2면〉

"농협, 관리부실이 '전산장애' 초래"
강석호 의원, 국회 농수산위 업무보고서 질타

농협중앙회 전산장애대란이 정보보안책임자 조차 채용치 않은 농협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 사진)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임시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농협의 허술한 대응과 전산 보안망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농협이 C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토록 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2개 시중 · 저축은행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 등 단 2곳만이 CSO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농협 전무이사는 당초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안담당관이 CSO를 겸임하고 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하다가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제시하며 정확히 답변할 것을 추궁하자 문제를 시인한 뒤 "앞으로 전사적인 보안업무를 맡을 CSO를 채용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농협의 해킹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강 의원의 질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전무는 강 의원이 "농협이 지난 2008년 해킹을 당해 돈으로 무마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다가 담당임원이 나서 사실을 확인하자 결국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강 의원은 "당시 피해에 대해 농협이 여러차례 회의 끝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합의로 끝냈다"면서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농협이 최근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금 수신고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신용이 최우선인 금융기관으로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경북매일 2011년 4월 27일자 1면〉

영덕 영양에 농공단지 신규 허가
강석호 의원 "사업 승인 지역고용창출 큰 도움"

정부가 영덕과 영양군 등 경북도내 2곳에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을 허가했다.

26일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 사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덕군 금호지구와 영양군 남영양지구 등 특화농공단지 2곳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

이 가운데 영덕군 금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면적이 13만7천534m^2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4천만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부담 등 120억원에 이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물 1 · 2 · 3차 가공업과 물류 · 유통 R&D 지원센터 등인 만큼 앞으로 로하스 영덕수산식품 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군의 남영양 특화농공단지는 부지 3만1천239m^2 면적에 총 사업비는 국비 6억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자부담 등 모두 18억5천만원이다.

이 단지에는 농산물제조와 건조 및 김치가공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성장동력 발굴에 고심해온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

번 사업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을 결정하고도 부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진출로 고용창출과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경북매일 2011년 4월 28일자 2면〉

강석호 의원, 영덕자유총연맹 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부(지회장 신계석)는 27일 오후 4시 영덕군문화체육센터에서 '제4대 및 5대 회장단 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 취임식은 강석호 국회의원, 김병목 영덕군수, 허상호 경북지부장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기관 · 단체장 및 연맹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계석 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 읍 · 면별 회원 확대와 결속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연맹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유총연맹은 신 · 구세대를 아우르며 이념과 세대의 갈등해소에 앞장서는 공인 시민단체로 거듭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회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여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이강석 전 지회장을 비롯한 연맹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제5대 영덕군지회장으로 취임한 신계석 신임 지회장을 중심으로 발전적인 영덕을 건설하는데 연맹이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덕/김상현기자

〈경북매일 2011년 4월 29일자 3면〉

강석호 의원, 공영도매시장 법인 지정권 관련 간담회 개최

강석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경북 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의원은 28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및 올바른 농안법 개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출하자와 소비자,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권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또 도매시장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그 운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관리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 측은 지자체가 소비지의 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에도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 지정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산지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권한을 환수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또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지방도매시장 인허가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2-② 경북매일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삼일가족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주주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강석호 의원은 현재 그룹의 부회장도 아니며 삼일가족과 관련,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 실질적 사주에 대해서는 경북매일신문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는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다. 당연히 대구 · 경북지역 의원들의 동정이나 기사가 많이 소개된다.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이상득,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경북도당 이인기 위원장 등도 큰 차이 없이 소개됐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개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승호 포항 시장은 수시로 게재된다. 특별히 강석호 의원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편견이다.

강석호 의원이 경북매일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대구 ·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지역별로 비슷하게 다

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위 기사들의 제목과 본문 내용 자체에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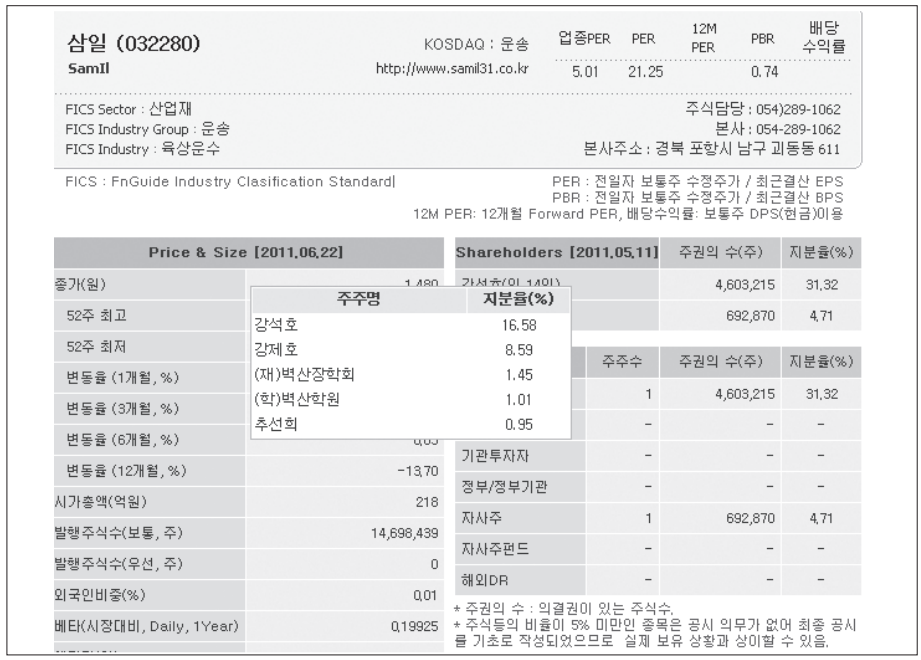
다만 경북매일이 삼일그룹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고, 삼일그룹의 부회장이 강석호 의원이며 경북매일의 실질적 사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북매일이 4월 한 달 동안에도 10여건의 기사에서 강석호 의원의 동정을 다룬 보도 행태는 신문이 사회적 공기인 지면을 이용하여 해당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북매일은 의견표명서를 통해, 삼일그룹은 경북매일에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주주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강석호 의원은 현재 삼일그룹과 관련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이 경북매일의 실질적 주인이라는 불만제기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기업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강석호 의원은 (주)삼일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의 16.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며, (주)삼일은 경북매일신문에 대해 지분율 20%이상(22.54%)의 관계 회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강석호 의원이 경북매일의 실질적 사주라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경북매일이 대구 · 경북지역 다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경북매일이 한 달간 10여건의 기사에서 강석호 의원의 동정을 다룬 보도 행태는 '언론사 실질적 주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사 지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여지는 있으므로 경북매일은 강석호 의원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 주의를 기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된다.

▣ (주)삼일 지분 구조 현황



삼일 (032280)
SamIl
KOSDAQ : 운송
http://www.samil31.co.kr

업종PER	PER	12M PER	PBR	배당수익률
5.01	21.25		0.74	

FICS Sector : 산업재
FICS Industry Group : 운송
FICS Industry : 육상운수

주식담당 : 054)289-1062
본사 : 054-289-1062
본사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FICS : FnGuide Industry Clasification Standard

PER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결산 EPS
PBR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결산 BPS
12M PER: 12개월 Forward PER, 배당수익률: 보통주 DPS(현금)이용

Price & Size [2011.06.22]	
종가(원)	1,480
52주 최고	
52주 최저	
변동율 (1개월, %)	
변동율 (3개월, %)	
변동율 (6개월, %)	
변동율 (12개월, %)	-13.70
시가총액(억원)	218
발행주식수(보통, 주)	14,698,439
발행주식수(우선, 주)	0
외국인비중(%)	0.01
베타(시장대비, Daily, 1Year)	0.19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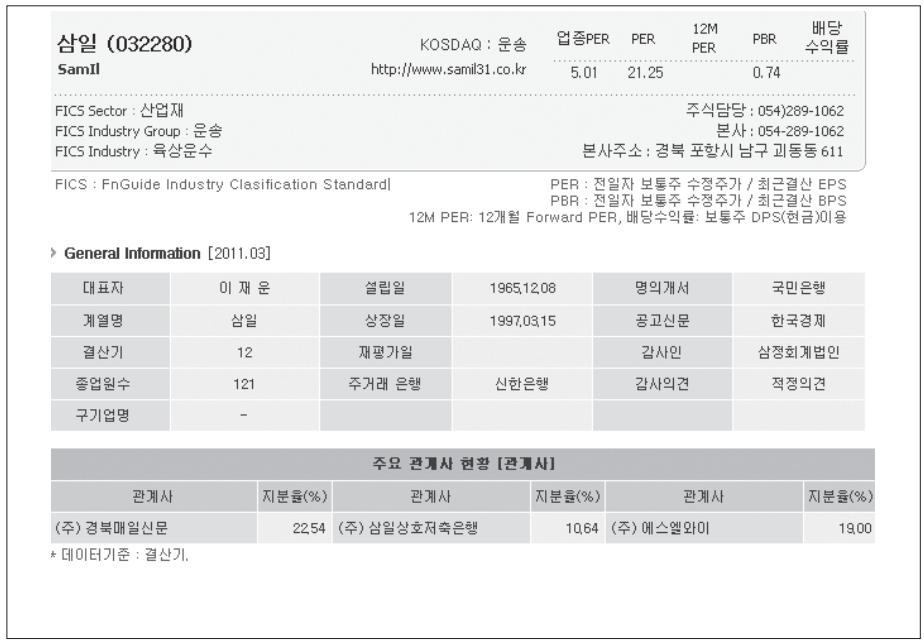
주주명	지분율(%)
강석호	16.58
강제호	8.59
(재)벽산장학회	1.45
(학)벽산학원	1.01
추선희	0.95

Shareholders [2011.05.11]	주권의 수(주)	지분율(%)
강석호외 14인	4,603,215	31.32
	692,870	4.71

	주주수	주권의 수(주)	지분율(%)
	1	4,603,215	31.32
	-	-	-
기관투자자	-	-	-
정부/정부기관	-	-	-
자사주	1	692,870	4.71
자사주펀드	-	-	-
해외DR	-	-	-

* 주권의 수 : 의결권이 있는 주식수.
* 주식등의 비율이 5% 미만인 종목은 공시 의무가 없어 최종 공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보유 상황과 상이할 수 있음.

▣ (주)삼일의 경북매일신문에 대한 지분율



삼일 (032280)
SamIl
KOSDAQ : 운송
http://www.samil31.co.kr

업종PER	PER	12M PER	PBR	배당수익률
5.01	21.25		0.74	

FICS Sector : 산업재
FICS Industry Group : 운송
FICS Industry : 육상운수

주식담당 : 054)289-1062
본사 : 054-289-1062
본사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

FICS : FnGuide Industry Clasification Standard

PER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결산 EPS
PBR : 전일자 보통주 수정주가 / 최근결산 BPS
12M PER: 12개월 Forward PER, 배당수익률: 보통주 DPS(현금)이용

General Information [2011.03]

대표자	이 재 운	설립일	1965.12.08	명의개서	국민은행
계열명	삼일	상장일	1997.03.15	공고신문	한국경제
결산기	12	재평가일		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종업원수	121	주거래 은행	신한은행	감사의견	적정의견
구기업명	-				

주요 관계사 현황 [관계사]

관계사	지분율(%)	관계사	지분율(%)	관계사	지분율(%)
(주) 경북매일신문	22.54	(주) 삼일상호저축은행	10.64	(주) 에스엘와이	19.00

* 데이터기준 : 결산기.

▲ 2011-1-15 독자불만처리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 주 문 〉

영남일보 2011년 4월 15일자 W5면 「에버랜드 내일밤 1만5천발 불꽃쇼 "폭포가 흐르고 불새가 날아다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 불만제기인은 영남일보 2011년 4월 15일자 W5면 「에버랜드 내일밤 1만5천발 불꽃쇼 "폭포가 흐르고 불새가 날아다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개장 35주년을 맞은 용인 에버랜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이벤트 프로그램, 대구에서 용인까지 가는 방법(경상관광 버스노선), 입장료, 대구영업소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광고 팜플렛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영남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용인 에버랜드!

울던 아이도 금세 울음을 그치게 할 정도로 국내 아이들에겐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매머드 테마리조트파크랜드'.

엔도르핀 웰빙 슬로 파크. 어떤 이는 에버랜드를 그렇게도 부른다. 그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몸속에 잠자고 있던 엔도르핀을 마구 솟구치게 하는 국내 최강 리조트 버전의 그린파크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입장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가보면 값을 하는 곳이다.

에버랜드가 올해 개장 35주년을 맞아 특급 버라이어티 이벤트 및 각종 오감만족 놀이프로그램을 장전했다.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무려 275일간 논스톱 개장 35주년 기념 축제의 팡파르를 울렸다.

영남일보 wee! 'y@u
테마파크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W5

(4월16일)
에버랜드 내일밤 1만5천발 불꽃쇼 "폭포가 흐르고 불새가 날아다닌다"

■ 개장 35주년 기념 275일간 논스톱 축제 '팡파르'

평소보다 3배 많이 하늘 수놓아
케이크·분수 등 새 불꽃 선보여
18일부턴 120만 송이 튤립축제
동물공연 '타잔' 선 58종 묘기
일본원숭이 등 오케스트라 공연

■ 35주년 숫자로 본 에버랜드

〈영남일보 2011년 4월 15일자 W5면〉

◆ 꼭 잡아라, 4월16일 불꽃쇼

숱한 행사가 있지만 내일 밤 9시 축제 전야제로 올려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는 절대 놓치지마라.

포시즌스 가든에서 열리는 이 쇼는 평상시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5천발보다 세 배나 많은 1만5천발의 축포가 용인 상공을 꿈의 궁전처럼 수놓게 된다. 여느 불꽃축제와 비교를 할 수 없다. 세계불꽃축제에 참가하는 등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에버랜드 엔터테인먼트 팀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에버랜드의 사계를 허공에 터치할 예정이다. 불꽃, 워터스크린, 서치라이트, 레이저, 영상, 음악 등 최첨단 특수효과가 총망라되며 케이크, 분수 등 새로운 기하학적 모양의 불꽃이 선보인다. 이들 불꽃은 컴퓨터로 원격작동되며 불꽃이 30분의 1초 단위로 세밀하게 발사된다.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나이아가라 불꽃은 0.5㎝ 간격으로 불꽃이 떨어지며, 지근거리에서 꽃의 개화 모습을 특수안전불꽃으로 보여준다. 관람객 머리 위를 나는 불새 불꽃도 볼만하다.

◆ **2011년 튤립축제 팡파르!**

올해 첫 축제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튤립축제'.

오는 5월1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장미축제와 함께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플라워 페스티벌. 작년보다 더 풍성해져 축제의 주무대인 포시즌스 가든과 글로벌 페어 지역에 심긴 120만 송이의 튤립이 당신을 이국의 세상으로 데려갈 것이다. 쌍방향 꽃축제를 추구한다. 그냥 관람로를 걷게하지 않는다. '체험형'으로 치장했다. 물론 어떤 방향에서 셔터를 눌러도 멋진 사진이 연출될 정도로 꾸몄다. 꿀벌과 벌집 모양의 프레임에 꽃을 꽂아 장식한 대형 모자이크컬처(Mosaic culture), 이끼류를 이용, 동물모양으로 만든 캐릭터 토피어리가 큐빅처럼 박혀있다. 파크 전체를 포토존으로 세팅했다.

◆ **꿀벌 헤어밴드 갖고 모험세상으로**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다면?

일단 숍에서 7천원짜리 헤어밴드를 구입해 착용시켜라. 그럼 에버비(Everbee) 모험이 시작된다. 밴드를 착용한 어린이는 놀이공원 곳곳에 서 있는 근무자들이 전하는 보너스 멘트를 듣게 된다. 꿀벌 관련 상품을 10%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고, 캐릭터 팝콘 구매시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주야간 퍼레이드 때 밴드 착용 어린이는 공연 도중, 출연진과 함께 꿀벌 댄스를 배우며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밴드는 재방문 때도 유효하다.

◆ **신규 공연 '내 사랑 타잔' 오픈**

아이들에겐 장난감처럼 친숙한 타잔.

지난 1일부터 35주년 기념 신규 동물 공연인 '내 사랑 타잔'을 오픈했다.

조종사(남지혜 사육사)가 타잔랜드에 불시착하면서 공연이 시작된다. 조난된 조종사가 타잔과 제인(오랑우탄) 등 동물들이 힘을 합쳐, 타잔랜드를 탐하는 악인들과 맞서 섬을 지키는 게 큰 줄거리.

동물도 역대 최대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흰손긴팔원숭이, 나무늘보, 50~70㎝ 크기의 애완 뱀인 볼파이손 등 다른 동물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귀한 동물 41종 139마리를 볼 수 있다. 관람 시간은 25분으로 기존 묘기 종목이 39종목에서 58종목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조종사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오랑우탄, 장미를 물어다주는 까치, 자판기에서 간식을 뽑는 앵무새, 엔딩 장면에서는 드럼 치는 오랑우탄, 피아노 치는 강아지, 보컬로 출연한 앵무새, 지휘자가 된 일본원숭이가 오케스트라보다 더 그럴듯한 선율을 선사한다.

◆ **기타 틈새 볼거리**

가족이 함께 나비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는 나비 체험교실(오는 5월29일까지), 미취학 아동과 왔다면 월별 테마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키즈 동물 사랑단(매주 화 · 수 · 목 3일간만)을 노크해보라.

색다른 사진을 원하면 연미복, 사파리 탐험가, 요리사 등 세가지 복장을 입고 손님을 맞이해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에버베어 포토타임을 이용한 뒤 캐릭터숍에서 각종 인형을 구입할 수도 있다.

겨울철 쉬고 있던 각종 놀이기구가 쏟아졌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후룸 라이드 등 에버랜드표 놀이기구들이 봄을 맞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움직이

는 밤의 요술궁전' 같은 야간공연, 문라이트 퍼레이드도 새롭게 펼쳐진다.

영업시간도 4월부터는 주말의 경우 밤 10시까지 연장 개장된다.

◆ **대구에서 가려면**

여행사 경상관광이 직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출발시각= 시지 아레나스포츠센터 앞(오전 5시10분)-수성구청 건너편 청구본사 앞(5시20분)-대구은행본점 건너편 GS25 앞(5시30분)-동아쇼핑(5시40분)-광장코아(5시50분)-성서홈플러스(6시).

△입장료(15명 이상 매일 출발)= 당일 어른 6만5천원. 어린이 6만원. 1박2일 어른 13만9천원, 어린이 12만8천원.

●문의= 에버랜드 대구영업소(053)561-4689

2-② 영남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용인 에버랜드는 세계 10대 테마파크에 해당할 만큼 인지도가 높다. 더욱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겐 테마파크의 '로망'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더욱 그러해 이런 테마파크에 대한 연 1~2회 정도의 소개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상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그런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 가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보지 못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 하더라도, 신문을 보고 난후 다시 요금이나 가는 법을 알기 위해 다른 매체를 통해 정보 검색을 해야 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선 매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이신문, 특히 지방지의 생존을 위해선 원스톱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일면 타당성을 지니나 지방 독자의 정보 욕구 충족에 앞설 순 없다. 또 영남일보는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오히려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보성과 광고성은 종이 한 장 차이일만큼 경계가 모호하다. 영남일보 위클리포유는 지방 독자에 정보 제공의 가치를 더 높이 두고 기사를 게재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영남일보 2011년 4월 15일자 'weekly④u' 섹션 「에버랜드 내일 밤 1만5천발 불꽃쇼 "폭포가 흐르고 불새가 날아다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영남일보는 의견표명서를 통해, 위 기사는 지방 독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게재한 것이며 영남일보는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오히려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미비점이나 독자가 경계 · 유념해야 할 정보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기사 뒷부분에 여행사 이름, 전화번호, 버스 출발시각, 이용 가격 등을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② 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 「보도준칙」 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6 독자불만처리
대구신문 발행인 김 경 발

〈주 문〉

대구신문 2011년 4월 5일자 12면 「쇼핑 · 여가 한꺼번에…신개념쇼핑몰 뜬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대구신문 2011년 4월 5일자 12면 「쇼핑 · 여가 한꺼번에…신개념쇼핑몰 뜬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사라기보다 해당 업체 팜플렛과 유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태도는 특정 업체 및 상품의 홍보를 돕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혹을 살 수 있으며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 2항 (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3조 5항 (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대구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대구신문 2011년 4월 5일자 12면〉

쇼핑 · 여가 한꺼번에… 신개념 쇼핑몰 뜬다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4월말 오픈
지하2층 · 지상5층 개방형 건축구조 채택
국내외 정상급 브랜드 '체험형 매장' 꾸며
독서 · 영화감상 · 문화강좌 '서비스 라운지'

"이제 닫힌 공간에서 쇼핑만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이 와서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형 융합 쇼핑 공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족단위로 쇼핑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몰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몇 년전 롯데쇼핑 내부에서 오고간 이야기의 한 대목이다. 국내 유통업계 1위 업체인 롯데쇼핑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신개념의 라이프 스타일 몰(Life Style Mall)을 적용, 오는 4월말 대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준비한 쇼핑과 여가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몰을 미리 살펴본다.〈편집자 註〉

쇼핑·여가 한꺼번에…신개념 쇼핑몰 뜬다

롯데몰(Lotte Mall) 이시아폴리스점 [illegible] 완성도.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내 4월말 오픈

지하2층·지상5층 개방형 건축구조 채택

국내외 정상급 브랜드 '체험형 매장' 꾸며

독서·영화감상·문화강좌 '서비스 라운지'

롯데몰이시아폴리스점조감도

〈영남일보 2011년 4월 15일자 W5면〉

▣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

◈ 유통계 새바람 '라이프 스타일 몰(Life Style Mall)'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몰인 '그로브몰(The Grove Mall)'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로 자리매김 한 지 오래다.

쇼핑센터라기보다는 휴양지 같은 느낌, 탁트인 공간이 마치 공원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그로브몰은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를 통해 한 곳에서 쇼핑과 여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몰링(Malling)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또한 일본에서도 도쿄만에 인접한 '라라포트(La La Port) 토요스' 등이 라이

프스타일몰 형태로 자리를 잡아 수많은 쇼핑객과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고있다.

이처럼 유통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어가는 라이프스타일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 자리해 대구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유통 거점도시이자 패션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게 될 전망된다.

◈ **롯데몰(Lotte Mall) 이시아폴리스점**

팔공산 주 집입로인 대구시 봉무동 부지에 조성되는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시와 포스코컨소시엄이 대구의 섬유, 패션산업 부흥을 위해 부지조성과 주거용지조성, 주요시설 건설 등에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해 건설중인 복합신도시로 그 중심에 들어서는 '롯데몰(Lotte Mall)'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정율 90%를 훌쩍 넘기면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국내 최초로 쇼핑과 여가를 결합한 신개념 소매업태 형태로 운영될 '롯데몰(Lotte Mall) 이시아폴리스점'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1층부터 3층까지 3개 층에는 국내외 유명 의류브랜드는 물론 해외유명 패션잡화, 화장품, 시계, 란제리 등의 편집매장도 함께 선보이게 된다.

특히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은 지역 상업시설에서는 보기 드물게 개방형 건축구조를 채택해 각 매장을 나서면 야외로 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별도로 확보하고 유럽 공원풍의 산책길을 조성하는 한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트랙도 마련하는 등 가족 단위 나들이에 편리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3층과 4층에는 7개관 1천186석의 규모로 멀티플렉스영화관 CGV가 들어서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한 봉무지구 일대에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

◈ **국내 최초 'One-Day 라이프스타일 공간' 제안**

해외유명브랜드를 포함한 국내외 최정상급 브랜드 110여개가 동시에 들어

서는 등 화려한 매장구성을 선보이는 '롯데몰'의 메인 타깃 고객층은 어린 자녀를 동반한 30~40대와 20대 커플 고객들이다.

특히 '자라', '갭', '유니클로', '나이키' 등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인기 해외 글로벌 SPA 브랜드가 대규모의 매장으로 선보이고, 아웃도어를 비롯한 스포츠 상품군은 지역 상권내 최대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최근 들어 시장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등산, 캠핑, 바이크, 스크린골프 등의 상품군에서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매장'으로 꾸며진다

이밖에도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은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장내에 별도의 고객휴게 공간을 만들어 쇼핑객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번거러움 없이 한 장소에서 독서나 영화감상, 휴식과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라운지'를 만드는 등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롯데몰의 '서비스라운지'에는 어린이 도서를 비롯해 약 3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 각종 장르별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별도의 영화 감상실과 인터넷이 가능한 공간 등 쇼핑객들에게 유용한 공간을 다양하게 갖추게 된다.

또한 어린이 쇼핑객을 위해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색상과 소재를 사용한 지역 최대규모의 친환경 '키즈 테마파크'를 만들어 쿠킹스튜디오 등의 각종 놀이시설과 음악놀이교실, 영어교실, 어린이 요가교실 등의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은 건물 주변 경관도 지역의 대표명소로 꾸미기 위해 진입로에는 유채꽃 정원, 패밀리포토존 등이 들어서는 '플라워 가든'을 만들어 연중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팔공산의 대표 수종인 메타쉐콰이어를 건물 주변에 심어 조성한 '메타쉐콰이어길'은 팔공산 자연환경과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도록 꾸며진다.

또한, 전체 길이가 11km에 달하는 둘레길을 만들어 가족들이 즐겁게 거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부대시설로는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등을 취급하는 전문 식당가는 물

론 색다른 분식을 취급하는 '스쿨푸드', 그리고 가족단위 쇼핑객을 위한 '패밀리레스토랑' 등 20여 개의 테마형 푸드코트가 마련되며 지하 1~2층에 1천200대, 지상에 900여대 등 동시에 2천100여대를 주차할 수 대규모 주차공간도 들어선다.

박동희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장은 "기존 백화점의 경우 전체 영업면적 가운데 판매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웃돌지만 봉무동에 새로 들어서는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은 판매공간이 60%대 머문다"며 "나머지 공간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과 오락시설들로 채워져 이곳을 찾은 고객들의 체류시간을 반나절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룡 기자 zpel@idaegu.co.kr

2-② 대구신문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오픈하는 '롯데몰 이시아폴리스점'을 소개하면서 해당 쇼핑몰의 장 · 단점을 균형 있게 다뤄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입지, 내부 구조, 부대시설, 조경, 디자인 등에 대해 장점 위주의 판촉용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항(사회 ·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3조「보도준칙」⑤항(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7 독자불만처리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 문〉

한겨레 2011년 5월 17일자 10면 「'재건축 뻥튀기 정보' 못거른 서울시」 제하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이 유〉

1. 한겨레 2011년 5월 17일자 10면 「'재건축 뻥튀기 정보' 못거른 서울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상기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여 저희 고덕2동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 기사 각 부분에 대한 추진위 해명

• 기 사 ①

김씨가 사는 고덕 2-1지구는 가장 먼저 주민들의 추정분담금을 공개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추진위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공시 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를 대부분 고령자인 가옥주들이 하나둘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 추진위 해명

추진위에서는 2011년 4월 29일 사업계획 및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안내 책자를 토지 등 소유자 481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바 있으며 2011년 5월 12일 반송된 우편물 92통을 일반우편으로 재송부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진위에서는 상기 기사와 같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활동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또한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란 내용도 과장된 표현으로 사료되며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서명란은 없는 것입니다.

• **기 사 ②**

지난 12일 주민 10여명이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하자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 정보제공을 중단하고~(이하생략)

⇒ **추진위 해명**

서울시에서 공공관리과-102955(2011.5.12)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서비스 일시 중지 홍보 및 계도안내"의 제목으로 시달한 내용에 따르면, '클린업 시스템의 고도화 용역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2011.5.31까지 일시 중지하며 2011.6.1부터 새롭게 단장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클린업 시스템 일시 중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의 전산안내에서도 2011년 5월 12일 동 내용이 안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적 상황을 등한시 하고 '주민 10여명이 찾아가 항의하자 클린업시스템 정보제공을 중단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하여 대다수 주민여러분이 동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초기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 지구에 대한 제반 내용이 공공관리차원에서 관리된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왔고, 주민들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현재시점의 개인별 개략적 분담비용을 확인하여 판단에 참고해왔기 때문입니다.

• **기 사 ③**

30평대 아파트도 주고 11억원을 더 얹어준다는데 재건축 안하면 바보 아니

에요?

보상가로 치면 23억 7000만원 이었다.

⇒ 추진위 해명

35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632,295천원인데 11억원과 합하면 어떻게 23억 7000만원이 되는지? 또한 추진위는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25~30% 이상 높게 잡았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음을 첨언합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한겨레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겨레 2011년 5월 17일자 10면〉

'재건축 뻥튀기 정보' 못거른 서울시
고덕동 추진위, 클린업시스템에 부풀린 보상가 올려
주민들, 서울시 자료로 믿고 동의…시 "정보제공 중단"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김아무개(67)씨는 동네에서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에 반대해왔지만 "서울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까 믿었다"고 16일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 누리집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올려놓은 자료를 확인한 뒤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30평대 아파트도 주고 11억원을 더 얹어준다는데 재건축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보상가로 치면 23억7000만원이었다. 그가 사는 224㎡(68평) 단독주택의 3월 말 현재 공시가격은 8억3000만원이다.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재개발 · 재건축 등 주택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의 하나로 내놓은 클린업 시스템이 출발부터 말썽을 빚고 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월 클린업 시스템 누리집을 만들어 추진위나 조합의 사업 추진 정보와 사업비, 주민 개인별 추정분담금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재건축 사업지구의 추진위가 수익성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자료를 올리고 이를 근거로 주민들한테서 사업 추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된 재개발 · 뉴타운 사업 등 600여곳의 정비사업장 가운데 김씨가 사는 고덕2-1지구는 가장 먼저 주민들의 추정 분담금을 공개했다.

김씨만이 아니다. 추진위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를 보여주자, 대부분 고령자인 가옥주들이 하나둘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었다. 보상가가 추진위에 의해 부풀려진 정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이미 동의서에 서명 · 날인한 뒤였다. 추진위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25~35% 이상 높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 수익을 부풀린 뒤 "서울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가 제공한 기준에 맞춰 나온 결과"라고 홍보했다고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 지역은 필지는 크고 토지 등 소유자는 적어서 수익성을 다른 정비구역과 비교하면 안 된다"며 "부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주민 10여명이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하자 서울시는 클린업 시스템 정보 제공을 중단하고, 시스템에 나온 정보만 믿고 서명한 주민들의 경우 필요하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분양가를 부풀리면 시나 구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거 없이 부풀린 사례는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영길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조직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를 믿지 않을 수 있겠냐"며 "시가 도구만 주고 어떻게 쓰이는지 감독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라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2-② 한겨레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 취재 및 보도 과정

본지 엄지원기자는 지난 5월 초 강동구 고덕동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지

역주민 황아무개씨로부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황씨 등 주민 10여명은 이날 서울시 공공관리과를 방문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인정받은 뒤 엄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스템이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추진위와 조합에 〈서울시〉라는 공신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인 고덕동의 가옥주들은 대부분 집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고령층입니다. 제보자들은 분담금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아파트를 짓고 삶터에서 쫓겨나느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추진위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상의 분담금 프로그램에 부풀려진 정보를 넣고 이를 고령층 가옥주들에게 보여주며 “서울시가 만든 자료니 믿으라”고 선전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엄 기자는 평소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바, 서울시 공공관리제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취재내용을 기사화하였습니다.

■ 추진위 반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기사①

「추진위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를 보여주자 대부분 고령자인 가옥주들이 하나둘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 추진위 반론: 추진위에서는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우송하고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으며 서명란은 없다.

→ 한겨레 해명: ‘서명을 하거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싸인해준다”는 표현은 재개발지역에서 다분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고 인터뷰 중 제보자들도 사용한 표현입니다. 조합 설립 동의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는 절차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기사 맥락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 **추진위 반론**: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란 내용은 과장된 표현이다.

→ **한겨레 해명**: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라는 표현은 복수의 제보자뿐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 또한 사용한 표현입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당지역의 분담금 내역을 언급하며 "분양가를 부풀리는 건 추진위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추진위가 악의적으로 부풀리면 관리하기 어렵다", "사업성 뻥튀기해서 올려도 구청에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수의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들 역시 공시가격의 저평가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공시가격의 1.7~2배 수준의 보상가가 합리적이며 추진위가 공개한 공시가격의 3배 수준인 총보상가 추정치는 허황되다고 지적했기에 엄 기자는 그에 근거해 판단했을 따름입니다.

→ **추진위 반론**: 추진위에서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활동을 한 적이 절대 없다.

→ **한겨레 해명**: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보여줬다"는 내용은 엄 기자가 실제로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 몇 차례나 사실임을 확인받았습니다. 필요할 경우 목격자 또는 당사자의 증언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사②**

「지난 12일 주민 10여명이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하자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 정보제공을 중단하고…」

→ **추진위 반론**: 기사 내용으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합리적 판단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때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한겨레 해명**: 제보자들이 담당부서를 방문한 12일 서울시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것은 팩트입니다. 또 엄 기자는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용역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체하기 위해 5월 말 클린업시스템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해 예정보다 일찍 프로그램을 내렸다〉는 내용을 확인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과 공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사업성을 분석할 때 악의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면 사업성이 쉽지 않으니 공신력을 이용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하나 걸린 것"이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제보자들의 담당부서 방문과 서울시의 시스템 가동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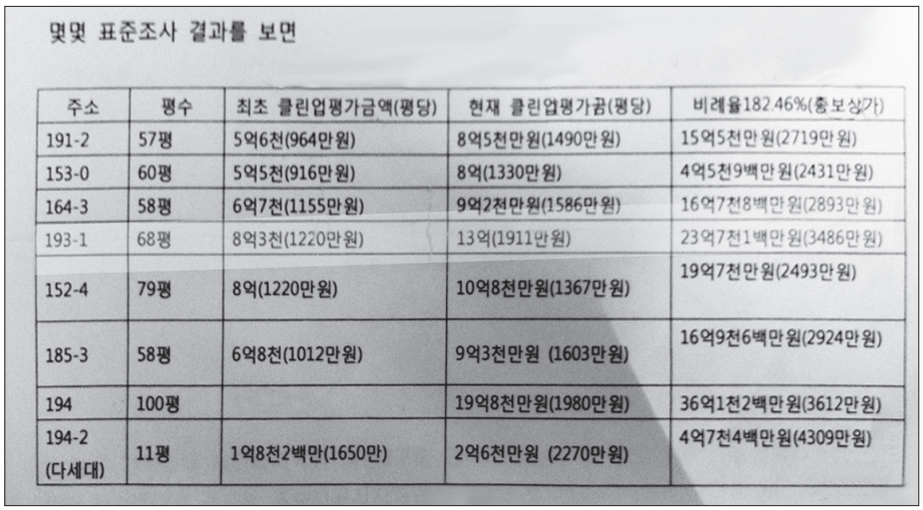
• **기사③**

「"30평대 아파트를 주고 11억원을 더 얹어준다는데 재건축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 보상가로 치면 23억 7000만원이었다.」

→ **추진위 반론**: 35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6억 3000만원인데 11억원과 합하면 어떻게 23억 7000만원이 되는가.

→ **한겨레 해명**: 해당 발언은 고덕2-1지구 60평대 주택에 살고 있는 가옥주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의 보상가 23억 7000만원은 기자가 임의대로 아파트 분양가와 추정 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제보자가 건넨 자료(첨부자료1.)에서 해당 주민 소유의 주택에 대해 추진위가 클린업시스템에 올린 보상 내역을 옮긴 것입니다. 고령자인 주민의 발언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벌어진 것일 뿐, 기자가 고의로 보상가를 부풀려 적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첨부자료1



몇몇 표준조사 결과를 보면

주소	평수	최초 클린업평가금액(평당)	현재 클린업평가금(평당)	비례율182.46%(총보상가)
191-2	57평	5억6천(964만원)	8억5천만원(1490만원)	15억5천만원(2719만원)
153-0	60평	5억5천(916만원)	8억(1330만원)	4억5천9백만원(2431만원)
164-3	58평	6억7천(1155만원)	9억2천만원(1586만원)	16억7천8백만원(2893만원)
193-1	68평	8억3천(1220만원)	13억(1911만원)	23억7천1백만원(3486만원)
152-4	79평	8억(1220만원)	10억8천만원(1367만원)	19억7천만원(2493만원)
185-3	58평	6억8천(1012만원)	9억3천만원 (1603만원)	16억9천6백만원(2924만원)
194	100평		19억8천만원(1980만원)	36억1천2백만원(3612만원)
194-2 (다세대)	11평	1억8천2백만(1650만)	2억6천만원 (2270만원)	4억7천4백만원(4309만원)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 2011년 5월 17일자 「'재건축 뺑튀기 정보' 못거른 서울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고덕2동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추진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 관계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옥주들에게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의 정보를 믿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이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한 사건을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가동을 중단한 이유로 삼은 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것이다.

추진위의 불만 사항 중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라는 내용, 즉 추진위가 제공하고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보상가의 왜곡 여부이다.

왜냐하면 보상가는 위 기사의 독자이자 클린업시스템의 정보 이용자인 원

주민들에게 있어 조합설립동의 의사결정의 결정적 요소이고, 주민들이 서울시 담당부서에 찾아가 항의한 사건의 단초이기도 하며, 정보제공자인 추진위, 그 정보를 공시한 서울시, 위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의 책임 여부를 동시에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자가 제보 주민으로부터 받아 기사 작성에 참고했다는 자료(추진위가 클린업시스템에 올린 보상 내역)를 검토한 결과, 기사에 적시된 보상금액은 위 자료의 보상 내역과 일치하였고, 따라서 '공시가격(8억 3천만원)보다 3~4배 부풀려진 보상가(23억 7천만원)'라는 기사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부풀린 보상가를 제공한 추진위는 물론, 재개발 사업 과정을 관리·감독 하는 서울시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겠고,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는 보도는 언론이 가진 '비판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서명'이라는 표현은 꼭 '사인(도장 대신에 자필로 직접 적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된 관용적 표현이고 기사 전체 맥락상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주민들이 서울시 담당부서에 찾아가 항의한 날에 클린업시스템 가동도 중단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두 사건(주민들이 서울시에 찾아가 항의한 사건,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가동을 중단한 사건)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한겨레 측 의견표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기자는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나름의 취재 노력을 했다고 여겨진다. 또한 추진위 관계자에게도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인용하면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보였던 만큼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 2011-1-18 독자불만처리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 문〉

영남일보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이명박 정부, 또다시 대구 · 경북을 갖고 노는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영남일보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이명박 정부, 또다시 대구 · 경북을 갖고 노는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영남일보의 주관적인 입장을 표제로 달아 무분별하게 전하고 있다. 이는 자칫 신문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 ④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3조 「보도준칙」 ①항(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항(표제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영남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영남일보 2011년 5월 16일자 1면〉

이명박 정부, 또다시 대구 · 경북을 갖고 노는가
'과학벨트'마저 정치논리로
대전 대덕으로 입지결정 유력
발표전 언론 통해 기정사실화
"짜여진 각본에 TK 또 울어"

대구 · 경북이 또다시 '분노의 눈물'을 흘리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지역의 마지막 염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마저 대전 대덕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16일 오후 1시30분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의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과학벨트 중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대덕단지로 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은 영남권 신공항이 무산되던 때와 판박이다. 신공항 사태 당시 3월30일 정부의 발표가 나오기 한 달 전쯤부터 청와대 참모들이 사견임을 전제로 '백지화'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어 수도권 언론에서 정부와 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발표는 그대로 갔다.

과학벨트가 대덕으로 갈 것이란 말도 얼마 전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나돌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입지 발표 날짜를 당초 이달 말에서 16일로 보름 정도 앞당겼다.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번에도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수도권 언론이 정부 · 여당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라며 대덕으로 갈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런 과정은 영남권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과학벨트도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형식적인 평가절차를 거쳤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청와대와 정부 · 여당이 정권 차원의 필요성과 내년 총선 · 대선을 겨냥한 정치논리로 대형 국책사업을 입맛에 맞춰 농단함으로써 지역의 염원을 잇따라 내팽개치고 있는 셈이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선진국은 국책사업 시행 공고를 내고 전문가가 심사해서 결정하면 끝이지만 우리나라는 정권 차원의 정치논리가 먼저 개입되고 거기에 맞춰 위원회가 만들어져 통과의례만 거치고 있다"며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어떤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평가위원회가 꾸려졌다면 평가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견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전혀 잡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구미갑)은 "어떤 전문가라도 경북 · 울산 · 대구가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인 논리로 이 지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과학벨트 G(경북) · U(울산) · D(대구) 유치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치적 판단과 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오로지 특별법에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만일 이런 요구가 묵살될 경우 3개 시 · 도 650만 시 ·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논리와 정치논리에 의해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데 따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과학벨트마저 농단을 당한다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의 골이 훨씬 깊어져 상당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선 “이명박 정부가 영남정권이 아닌 ‘수도권 정권’이고, 이 대통령 본인이 수도권 논리에 함몰돼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경북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지임을 감안해 방폐장과 원전 같은, 다른 지역이 기피하는 시설이나 고질 현안을 앞장서 떠맡아 정권의 부담을 덜어줬지만 그 보답이 지역의 염원을 외면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송국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2-② 영남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영남일보는 대구 ·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신문입니다. 따라서 대구 · 경북의 발전과 시도민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의 현안사업과 지역민의 정서를 지면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는 대구 · 경북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실의에 빠진 가운데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마저 기대와 달리 대전으로 결정될 것으로 확실시

되자 지역민이 느끼는 좌절감을 대변한 제목입니다. 특히 신공항에 이어 과학벨트도 정치 논리와 사전 시나리오가 작용한 것으로 비쳐져 국책사업 선정의 신뢰성이 비판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주 제목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대구 · 경북을 갖고 노는가〉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매몰돼 대구 · 경북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소홀히 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꼬집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기사는 일반 스트레이트나 해설기사와 달리 〈뉴스분석〉 형식을 취한 기사입니다 따라서 제목이 다소 주관적이 느낌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당시 솔직한 지역민의 심정을 전하려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기해 주신 독자님께 감사드리며 향후 신문제작에 참고 하겠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구 · 경북 지역이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총선 · 대선을 겨냥한 정치 논리로 인해 또 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공식 발표 전부터 "대전 대덕특구가 과학벨트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특정 지역 내정설이 확산되었고, 실제로 5월 16일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 발표되었다.

이 날의 국내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면 每日新聞「과학벨트마저…MB에 대구 · 경북은 있는가」, 大邱日報「"과학벨트도 안돼? 그러면 방폐장 · 원전도 가져가라"」, 경북일보「정치벨트 안된다…G · U · D '주말 투혼'」, 경북도민일보「"나눠먹기식 정치벨트 즉각 중단하라"」, 光州日報「과학벨트 대전 내정설… 정권퇴진 불사」, 全北日報「분노한 전북 '정부 불복종' 선언」 등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역 대부분의 신문들이 현 정부의 국책사업 입지선정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인 지역민심을 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朝鮮日報「과학벨트, 후보지 확대해 지역갈등만 키웠다」, 경향신문「국책사업 갈등, 불지르는 정부」, 한국경제「과학벨트, 국론 쪼개고 결국 원점…세종

시 '판박이'」 등 전국 일간지들도 현 정부의 국책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지역민의 피해의식을 부추기거나 지역감정을 자극할 목적보다는 수도권 중심 개발에 따른 소외감, 쇠락하는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감 등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보도한 기사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발전과 지역이익 대변이 지방신문의 중요한 역할임을 감안하더라도 주 제목의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대구 · 경북을 갖고 노는가」라는 표현은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편집의 금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영남일보는 의견표명서를 통해 위와 같은 제목을 사용한 나름의 이유를 밝혔으나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신문의 품위를 고려해볼 때 보다 순화하여 보도하는 편이 좋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9 독자불만처리
경북일보 발행인 정 정 화

〈주 문〉

경북일보 2011년 5월 23일자 2면 「방폐물 반입 금지 · 월성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경북일보 2011년 5월 23일자 2면 「방폐물 반입 금지 · 월성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며칠 앞서 연합뉴스에서 게재한 기사다.

경북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싣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대신 실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경북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북일보 5월 23일자 2면〉

방폐물 반입 금지 · 월성원전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경주시의회, 시민단체와 중앙부처 항의 방문

경주시의회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방폐물 반입 금지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전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과 함께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23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며 "정부에 방폐장 내 방폐물 반입 중지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대정부 항의 총괄기구를 발족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나 월성원자력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천막 농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그 동안 연약 암반으로 공기가 연장된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저조하다"면서 방폐물 반입을 반대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시의회와 협조해 방

폐물관리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곽성일기자 kwak@kyongbuk.co.kr

〈연합뉴스 5월 20일자〉

"방폐물 반입 금지"..경주시의회 부처 항의방문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방폐물 반입 금지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전후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과 함께 지식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오는 23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중앙부처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며 "정부에 방폐장 내 방폐물 반입 중지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대정부 항의 총괄기구를 발족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나 월성원자력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와 천막 농성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그 동안 "연약 암반으로 공기가 연장된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저조하다"면서 방폐물 반입을 반대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시의회와 협조해 방폐물관리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haru@yna.co.kr

2-② 경북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 5월 20일 송고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타 언론사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행위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0 독자불만처리
새전북신문 발행인 박 명 규

〈주 문〉

새전북신문 2011년 7월 1일자 6면「'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 봉사활동'」제하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새전북신문 2011년 7월 1일자 6면「'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 봉사활동'」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밥알100개에 봉사100일'이라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를 정확한 취재도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제보자의 말만 듣고 보도하였습니다.

'모초등학교 모교사'라는 말을 썼으니 자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반 학부모들은 그 신문기사를 보고 이미 제보자가 저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린 이후라 담임교사인 저에 대해 더욱더 악의적인 소문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나쁜 평가가 확대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부당해 개인인 저의 생활과 직업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포함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담당 기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기자가 정말 기자라면 그 사실에 대해 충분한 양쪽 인터뷰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서 정말 정확한 보도를 해야 마땅한데도 기사를 읽어보면 편파적이며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한사람의 직업평가와 개인생활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만들어 훌륭한 기자들에 대한 평가까지 절하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불만제기인이 새전북신문 측에 보낸 반박문

새전북신문 7월 1일자 박규만 기자가 쓴 「'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 봉사활동'」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매우 다른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 반박한다.

첫째, 밥을 남긴 학생에 대하여 밥숟가락으로 세게 하다 밥알을 세게 했다는 부분과반찬을 남긴 학생에게 식판을 교실로 들고 가게 한 뒤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급식 지도시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것과 야채를 먹지 않는 편식을 개선하고자 야채를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격려를 하며 지도하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그래도 먹기 싫으면 버리라고 지도하였다.

교사가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급식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과연 교사가 학생이 편식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교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학생들은 대부분 야채를

먹기 싫어한다. 건강에 좋지 않아도 안 좋은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방임한다면 그 교사는 이렇게 억울하게 매도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교사는 방임해야 좋은 교사인 것인가

둘째, 학급 벌점제에 따라 밥을 남긴 학생에게 밥알 하나에 하루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이다.

학생이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 아프거나 힘든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만큼만 먹도록 하고 그래도 못 먹을 경우에는 버리도록 지도하였다. 어째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정말 의문이다. 선정적인 제목을 위해서 만든 문맥이라면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정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학급은 벌점제가 아닌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벌점은 학생 스스로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느끼고 개선하도록 운용 지도하고 있으며 벌을 주기위해서 운용한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학급의 규칙은 담임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를 상벌로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매 상황에 융통성 있는 판단을 통해 상벌제를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상점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그 행동의 바름으로 인한 스스로의 만족에 의해 강화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개선이 안되는 학생들에게는 벌점을 통해서라도 바른길로 지도하고자 하는 담임의 노력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한다는 말인가

셋째, 과도한 모둠벌점제와 생활개선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의 표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우리 학급은 모둠벌점제가 아닌 모둠상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호 어울려 살아가는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지도하였다. 모둠상점은 수업시간에 상호인터뷰를 통한 발표를 잘하거나 모둠수업태도가 우수하거나 모둠이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여긍정적 효과가 나온 경우에 바로 보상하였고모둠벌점은 모둠내 소속아이들이 같이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벌점을 주었다.

요즘 아이들이 부족하기 쉬운 개인적 성향, 사회적으로 연대의식을 느끼거

나 함께를 위해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키워주고자 모둠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 과정의 본질적인 면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벌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사는 정말 정식 신문사의 기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상벌점제를 통해 상점이 누적된 학생에게 매달 15개이상 30개이상 등의 단계별 상품과 특권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짝꿍선택권, 청소선택권, 문화상품권 등의 특권을 받거나 선택하도록 하였고 매월 학생들이 상품을 받아갔으며 벌점이 누적된 학생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그날 남아서 교실정리정돈 등의 봉사를 통해 바르지 못한 수업태도와 생활태도를 개선하도록 지도하였다.

생활개선문은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하거나 교실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쓰도록 하여 바른 인성과 학생의생활 태도를 지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쓰게 하였고 집에서 과제로 해오라고 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뒤에 나가서 쓰라고 하는 등 단계별로 학생이 바른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격려하였다. 생활개선문쓰기와 같은 지도방법은 교과부에서도 인정한 지도방법이다. 학생이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분과 앞으로의 개선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쓰고 있는 방법이다. 기자는 어떻게 생활개선문을 쓰는 것이 학생을 괴롭힌다는 입장만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써서 교사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기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객관성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벌점으로 인해 적응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 전학간 경우와 벌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

전학 간 학생은 학원이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학생의 어머님이 담임인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반 학생이 정신병원을 찾아갔다는 당사자의 말이나 그로 인해 상담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는 말씀조차 담임인 나에게 한 학교측 인사나 학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그 학생이 누구인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정신과에서 벌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벌점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진단이 확실히 나온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말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을 인터뷰 한 것으로만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심지어 그 학부모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학급의 학생의 아픔조차 이 사건에 이용하려고 그 부모님에게 접근했다. 그렇게 남의 자녀의 아픔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의 승리에 집착하는 비교육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정보만을 듣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는데 만일 실제로 그 학생이 존재하고 그 학생이 이렇게 기사에 자기의 정보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 학생과 부모님의 아픔을 더 가중시킬 기사라는 면은 고려하고 썼는지 묻고 싶다.

다섯째,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교장실에서 면담할 때 급식문제와 바닥에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교장실에서 학부모와 면담할 때 극도로 흥분하여 교사와 학교를 조롱하며 모든 해명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학부모에게 일일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할 경우 더욱더 의사소통이 안될 것을 생각하여 담임으로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하고 추후 학급경영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하였다. 과연 이럴 경우 학무모와 드잡이판을 벌여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았겠는가, 과연 그렇게 싸우는 것이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로서 올바른 모습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다.

여섯째,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수차례 지도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교장실에서 교감선생님을 통해 5월 중순 부장 회의 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학부모가 학급경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경우 한번 뿐이며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자세한 정보를 담임인 내게 알리지 않았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새전북신문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새전북신문 2011년 7월 1일자 6면〉

'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 봉사활동'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벌점고문' … 벌점 스트레스로 전학가기도

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조례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할 정도로 침해되는 일이 발생, 학부모들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밥을 남기자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세도록 했다가 나중에는 밥알을 세도록 했다. 그리고 밥알 하나를 남길 경우 그 학급이 운영하고 있는 '벌점제'에 따라 하루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교사가 '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동안 봉사활동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반찬을 남긴 학생에게는 식판을 교실로 들고 가게 한 뒤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도록 했다. 이 학급은 '모듬'이 벌칙을 받는 공동벌칙제를 운영, 다른 학생들이 "다 안 먹으면 알아서 해" 등의 핀잔을 줬다. 여기에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생활개선문, 이른바 반성문을 책상이 아닌 교실 바닥에서 200~300번씩 쓰도록 했다.

학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통곡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잠을 자다가 '벌점이 아니에요'라는 잠꼬대를 하기도 한다"며 "벌을 주기 위해 벌점제를 실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선생님을 무섭게 여기며 벌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런데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전학을 보냈다. 우리 아이도 선생님이 무서워 학교 가기 싫다며 전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학대와 고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천천히 먹어보라고 했을 뿐 밥알을 세라고 하거나 식판을 교실로 가져가라고 한 적 없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식판을 들고 가도록 하고 바닥에서 반성문을 쓰라고 한 점을 인정했다”며 “밥알 얘기도 웬만한 학생은 다 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의 교장은 “선생님에게 주의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담임편성에 관한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만 기자

2-② 새전북신문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반박은 6개항으로 이루어졌고 6개항에 대한 새전북신문의 의견을 항목별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인은 밥을 남긴 학생에 대해 숟가락으로 밥알을 세게 했다는 부분과 반찬을 남긴 학생에게 식판을 들고 교실로 가서 급우들이 보는 앞에서 남긴 음식을 다 먹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학급 벌점제에 따라 밥을 남긴 학생에게 밥알 하나에 하루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인만 부정하고 있는 상태임. 민원인 학급의 학생 28명 중 27명이 담임 교체 요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했고, 학교장은 “9월 1일자로 담임교체 예정인 상황이다”라고 밝힌 사실에 근거해 보면 민원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전체 28명 중 담임교체요구서 서명 학부모 24명, 위임 학부모 3명, 담임교체 반대 1명)

셋째, 과도한 ‘모둠벌점제’와 생활개선문을 시행하고 있다는 기사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8월 16일 편집국장이 직접 교장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에서도 “모둠상벌제와 생활개선문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음. 다만 민원인은 신문기사에 표현된 ‘모둠벌점제’가 아닌 ‘모둠상벌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 학부모의 표현은 분명히 '모둠벌점제'였음.

넷째, 벌점으로 인해 적응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해 전학 간 경우와 벌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원을 찾아갔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월 16일 편집국장이 직접 교장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전학을 간 학생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그 같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벌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원에 갔거나 전학을 간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줌.

다섯째,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교장실에서 면담할 때 급식문제와 바닥에서 반성문을 쓰게 한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담 당시 현장에 있던 교장, 교감, 교육청 장학사, 학부모들은 분명히 인정했다고 확인하고 있고 민원인은 "사과했을 뿐 인정하지 않았다"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여섯째, 교장선생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수차례 지도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월 16일 편집국장이 직접 교장선생님과 통화해서 확인한 결과, 교장선생님은 "최소한 5차례 이상 주의와 지도를 했으며 근거 자료도 있다"고 확인해 줌.

이 밖에 취재과정에서 보도하지 않은 몇 가지 확인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엿볼 수 있었음. 먼저 해당교사가 소속된 전교조 전북지부의 한 관계자가 "그 교사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고 확인했다. 개인적 성격이 그러니 감안해 달라"고 한 점, 교육청 장학사가 "학부모의 주장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대체로 사실이라는 점", 해당 학교의 교장이 "몇 번에 걸쳐 주의를 줬다. 회의해서 주의를 준 기록도 날짜별로 다 있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한 점에서 '교권'을 주장하는 교사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새전북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상호 주장이 다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나, 일부 민원인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이라 하겠음.

그러나 7월 1일자 보도 이후 민원인이 취재기자에게 불만을 제기해 「"밥알 세라는 건 편식개선을 위한 지도"」 제하의 기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실어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바 있었음.

〈새전북신문 7월 4일자 6면〉

"밥알 세라는 건 편식 개선지도"

급식 중 발생한 보도와 관련 담당 교사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3일 알려왔다. 본지 7월1일자 '밥알 100개 남기면 100일 봉사활동' 보도와 관련 해당 교사는 "밥알을 세도록 하고 교실로 식판을 들고 가 먹도록 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은, 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이고 노력해서 안 되면 버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이 전학한 이유는 가까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였으며, 교장이 수차례 주의를 당부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고 밝혔다./박규만 기자

이 보도가 나간 후에는 학부모들이 "담당 교사의 말이 사실이 아닌데 다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느냐"며 "학생들에게 다시 물어봐도 밥알 세라고 했다. 정 그렇다면 학생들을 데려다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항의,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오기도 했음.

따라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또는 증언은 민원인만의 주장일 뿐, 학생, 학부모, 교장, 교감, 교육청관계자들은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임. 결국 민원인의 입장이 개진된 후속 보도에도 불구하고 신문윤리위원회에 '불만제기서'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 운운하면서 '엄중 처벌'을 요청한 것은 사리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행위로 판단됨.

또한 해당교사가 본지와 도교육청에 고충처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바, 도교육청이 8월 17일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해당 교사의 진술을 받고 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자료를 종합한 결과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처리한 점에서 해당교사는 오히려 사실을 부인한 채

지나칠 정도로 '교권'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안은 "새전북신문이 일부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 위 기사와 관련된 해당 교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그러나 새전북신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고 기사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기사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새전북신문은 위 기사가 보도된 3일 후에 「"밥알 세라는 건 편식개선을 위한 지도"」 제하의 후속 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당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노력도 보였다.

한편, 해당 교사는 위 기사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8월 17일 교육청 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현장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교사의 민원을 '기각'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1 독자불만처리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 주 문 〉

경인일보 2011년 9월 26일자 12면 「배려와 편애의 차이」 제하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이 유 〉

1. 불만제기인은 경인일보 2011년 9월 26일자 12면「배려와 편애의 차이」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 제보 사유

- 해당 기사는 본문에서 'A'학교라 지칭된 에바다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또 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사립학교 교장 자격과 관련하여 '교장연수'를 삭제함으로써 에바다 학교 교장이 그 혜택을 보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 무근임.
- 이처럼 기자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악의적 기사로 인하여 에바다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정정보도와 공개적인 사과 그리고 해당기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함.

▣ 기사 내용의 실제 사실관계

- 도교육청의 에바다 학교에 대한 실제 지원 내용 : 에바다 학교의 노후된 건물과 학교 기숙사에 대한 신축예산 47억원이 전부이며, 이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원이 확정된 내용임. 기자는 기사 후반부에 "도교육청이 문제의 평택 A학교에 하고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라고 기술하여 마치 신축예산 이외에도 엄청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신축예산 이외에는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이후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은 없음. 신축예산 외의 모든 지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전임 교육감 재직 시절에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항임.

- 교장 자격연수 특혜 관련 : 도교육청에서 교장자격과 관련하여 '교장 자격연수'를 삭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에바다 학교 교장은 교장 자격연수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중이며, 따라서 아직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임. 현재 엄밀히 '교장직무대행'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정식 교장이 아닌 직무대행에 맞추어서 지급(현재 교감급여로 지급중) 받고 있음.

그럼에도 마치 에바다 학교 교장이 교장 자격취득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됨.

▣ 결론

- 이와 같이 에바다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시설 문제로 인하여 현재의 김상곤 교육감 이전인 김진춘 교육감 재직시절부터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와 기숙사 신축을 위한 예산 47억 지원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정된 것이며, 노후된 시설을 위한 보수예산을 매년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개축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임. 또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에는 상기 학교와 기숙사 개축예산 47억 지원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음.

- 따라서 에바다 학교가 현재의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특별한 관계에 의존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완전히 왜곡된 기사이므로 정정과 기자의 사과문 개재를 요청함.

- 또, 에바다 학교 교장이 교장 자격 취득에 관하여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은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악의적인 왜곡보도라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도 정정과 기자의 사과문 개재를 요청함.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풍문과 추측으로 기사를 남발하여 에바다 학교와 에바다 학교 교장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인일보 문성호 기자에 대한 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함.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경인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인일보 2011년 9월 26일자 12면〉

문○○/사회부

배려와 편애의 차이

지난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 도교육감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인물이 교장으로 있는 평택의 한 특수학교에 도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침까지 어겨가며 수십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문제가 한바탕 파문을 일으킨 와중에 밝혀진 이같은 지원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와 이를 위해 후보를 포기한 인물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보도가 나간 직후 도교육청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이런 지원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공정성'의 문제로 판단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기자가 이번 지원건을 '편애'라고 본 것은 무상급식 시행 이후 예산부담 때문에 각종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평택시와의 교육대응투자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은채 '보통교부금'으로 꼭 예산을 집행한 것이 옳은가를 따져보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온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편타당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배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선다면 '편애'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문제의 평택 A학교에 하고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상당수의 사업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문제삼지 않아 왔다. 하지만 몇몇 지원이나 정책은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다. 도교육청이 올 3월부터 사립학교의 교장자격증 취득 기준에서 '교장 연수' 부분을 삭제했고, A학교 교장이 바로 올해 이 혜택을 보게된 것도 찜찜한 것 중 하나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도 좋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에 지

원을 집중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달할 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moon23@kyeongin.com)

2-② 경인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해왔다.

▣ 에바다 학교에 대한 실제 지원은 합법적으로 편성된 신축 예산 47억원이 전부이며 특혜는 없었다는 불만에 대해…

▲에바다 학교 개축비 47억3천300만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

• 경기도 교육청은 내부지침까지 어겨가며 지원에 나섬

경기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가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2010년부터 교사, 화장실, 식당, 기숙사 등의 개축 및 개보수 사업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대응투자사업(학교법인,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며 도교육청 부담비율을 50% 이하 및 최대 5억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부지침까지 마련함.

경기도 교육청이 에바다 학교에 47억3천399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스스로 내부지침을 어긴 것이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실례로 경기도 지역의 재난위험시설(D급)로 지정된 학교 가운데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해에 바로 개축 예산이 지원된 사례는 없으며, 용인 용동중학교 교사동은 종전 국감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2005년부터 재난위험시설(D급)로 개축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수 년동안 계속 사용해 왔으며 올초 개축비용 9억7천여만원중 5억8천400만원을 편성하자 도교육청도 3억8천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개축이 진행 중임.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 해명자료로 제시한 2004, 2008년 특수학교 지원현황에서도 시설 개보수 및 개축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진행했으며 일부 특수학교는 교부금이 삭감되기도 함.

• 에바다학교 교사 등 개축예산이 당초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불투명.

경기도 교육청은 에바다학교 시설이 낡아 예산지원이 시급했으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면 2011년 하반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2013년이나 돼야 준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했으며,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모두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인 만큼 어떤 교부금으로 지원해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교과부는 교사, 기숙사, 식당 등 시설개선사업은 대응투자가 원칙이며, 대응투자가 안 될 경우 후순위로 배정돼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것은 교과부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집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많았음.

▲에바다 개축예산 지원이 김상곤 교육감 이전 교육감 시절에 확정된 사업인가?

민원인은 에바다 개축예산 지원이 김상곤 교육감 이전 교육감 시절부터 확정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2008년 9월 에바다 화장실 보수공사(5천만원), 2009년 1월 에바다학교 교원편의시설 개선공사(5천만원), 2009년 5월 에바다학교 지붕보수공사(6천만원)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

민원인의 주장대로 김상곤 교육감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면 경기도 교육청은 2~3년 뒤에 철거 예정인 건물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시 담당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임.

경기도 교육청은 에바다 학교에 2008년 2억3천100만원, 2009년 1억1천100만원을 시설사업비로 지원했지만 2010에는 시설사업비 지원이 없음. 따라서 에바다학교의 개축 결정이 이미 2010년 경기도 교육청의 본예산을 편성하

던 2009년 말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음.

▲학교 교사와 기숙사 개축예산 47억원 지원 이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나?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와 기숙사 개축 예산 47억3천300만원 이외에 지난 8월부터 월163만4천원의 탁구부 코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사립학교 운동부 코치 급여는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하거나 운동부 발전기금을 통해 학교 행정실에서 지급하고 있음. 이것도 타학교에 비해 특별 대우임.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여러 학교의 선수들을 지도하는 전문코치(순회코치라고도 함)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바다학교의 코치는 에바다 학생들만 지도하고 있어 전문코치로 보기 어려움.

그 외 에바다학교에는 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2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법에 정해진 지원이며 다른 특수학교와 비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기사에서도 '도교육청이 문제의 평택 A학교에 하고 있는 지원은 다양하다. 상당수의 사업들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배려라고 판단하고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 왔다...'라고 표현했음.

▣ 에바다 학교 교장은 교장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고 현재 교장직무대행으로 교감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교장 자격관련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는 불만에 대해…

에바다학교 홈페이지에 권오일 교장은 '에바다 학교장'으로 기록돼 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을 '교장'으로 소개하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도 "권오일 교장이 올3월에 교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으며 연합뉴스 등 타 언론도 '올해 교장으로 승진한'으로 표기했지만 이에 대한 정정요구는 전혀 없었음.

경기도 교육청 내부 제보자 등도 권오일 교장에게 교장자격증이 교부됐으

며 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해 줘 기자가 언급한 것임.

경기도 교육청 대변인실은 본 보도 이후 교장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교장자격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직급은 교감이라고 밝혔지만, 타 사립 중 · 고교 교장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교장 연수를 받지 않으면 조건부 교장자격증이 교부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함. 따라서 이것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음.

아울러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교장 관련 문제에 대해 '특혜'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

▣ 불만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경인일보의 의견

독자의 불만이 제기된 기사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의심할만한 어떤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음.

독자는 경인일보가 특혜를 주장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나, 해당 기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배려'를 넘어 '편애'라고 볼 수 있는 지원을 했다는 내용으로 불법이나 특혜를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독자가 제기한 기사의 정정과 기자의 사과문 게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독자는 경인일보 2011년 9월 26일자 오피니언면 '노트북'난에 게재된 「배려와 편애의 차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기사 본문에서 '평택 A학교'라 지칭한 에바다 학교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특별한 관계에 의존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부분과 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사립학교 교장 자격증 취득 기준에서 '교장연수'를 삭제함으로써 에바다 학교 교장이 혜택을 보았다는 내용은 사실 왜곡이므로 기사 정정과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인일보 측 의견표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기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 만하고, 해당 기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나름의 취재 노력을 했다고 여겨지므로 위 기사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국민일보 「김상곤 교육감과 '단일화'한 후보가 교장인 학교에…특별예산 47억 지원 논란」, 세계일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립 특수학교 개축에 47억여원 지원」, 한국일보 「김상곤 교육감도?…단일화 후보 학교 지원 논란」,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A학교 거액 지원에 의혹 눈길…왜?」 등 전국 일간지와 뉴스통신이 일제히 의혹을 제기할 만큼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배려', '편애' 등 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잘못을 지적한 보도는 언론이 가진 '비판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경인일보는 9월 20일자 1A면 「사립 특수校와 특수관계? 경기도 교육청 거액 '편법지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한다.

▲ 2011-1-23 독자불만처리
광남일보 발행인 김 진 영

〈주 문〉

광남일보 2011년 10월 27일자 3면 「'새 정치' 갈망이 판세 갈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광남일보 2010년 10월 27일자 3면 「'새 정치' 갈망이 판세 갈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0월 27일 00시 07분에 먼저 게재한 기사다. 광남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이 기사를 그대로 싣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대신 실었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광남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광남일보 10월 27일자 3면〉

'새 정치' 갈망이 판세 갈랐다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 정치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사회 세력의 대표를 자처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을 '불임 정당'으로 만든 데 이어 올해로 14돌을 맞는 대표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기세를 꺾었다.

2011년 '대한민국 정통 정당'이 국민의 불신에 직면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당에 정치를 위임해온 유권자들이 정치 주체로 역할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정치 참여 수단과 결합해 증폭됐다.

문제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욕구의 확장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제3의 정치세력'이 회자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을 한차례 제압한 시민세력이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로서는 '제3 세력'의 모양새와 정치 행태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박원순 당선자에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상태다.

동시에 야권의 통합 논의가 기폭제가 될

〈연합뉴스 10월 27일 00시 07분〉

'새 정치' 갈망이 선거 갈랐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10 · 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한국 정치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사회 세력의 대표를 자처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10년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을 '불임 정당'으로 만든 데 이어 올해로 14돌을 맞는 대표 보수정당 한나라당의 기세를 꺾었다.

2011년 '대한민국 정통 정당'이 국민의 불신에 직면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당에 정치를 위임해온 유권자들이 정치 주체로 역할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정치 참여 수단과 결합해 증폭됐다. 문제는 '새로운 정치'를 향한 욕구의 확장성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제3의 정치세력'이 회자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을 한차례 제압한 시민세력이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로서는 '제3 세력'의 모양새와 정치 행태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박원순 당선자에 이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라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상태다.

수 있다. 이른바 야권 전체가 한 데 모이는 '빅텐트'의 중심축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기성 정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제3의 세력이 정당의 모습을 갖추려 할 것"이라며 "이어 야권 통합의 중심이 민주당에서 제3의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성 정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개념 학생', '개념 직장인' 등으로 불리는 점도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강타한 바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 정치'를 내세운 그룹이 기성 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일단 박수를 받았지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이번 서울시장 보선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정당들도 당장 대변혁에 착수할 태세다.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을 읽은 정당들이 전열을 정비, 스스로 '새 정치'의 주체로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력의 출현 및 확장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시적 바람에 편승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노리고 출범한 정당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dwkim@

동시에 야권의 통합 논의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야권 전체가 한 데 모이는 '빅텐트'의 중심축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기성 정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으로 제3의 세력이 정당의 모습을 갖추려 할 것"이라며 "이어 야권 통합의 중심이 민주당에서 제3의 세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기성 정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개념 학생', '개념 직장인' 등으로 불리는 점도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2학년 학생인 김모씨에게 "제3의 세력을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의 답변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을 강타한 바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새 정치'를 내세운 그룹이 기성 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일단 박수를 받았지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밖에서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제도의 안에 들어가 스스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안철수 원장만 해도 정치 ·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개혁을 해왔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 40대 직장인의 말은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한 30대 회사원은 "지금의 신드롬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기존 정치세력을 무시할 수 없고 제3의 세력이 출범해도 조직과 추진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 대선에서 역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이번 서울시장 보선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정당들도 당장 대변혁에 착수할 태세다.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을 읽은 정당들이 전열을 정비, 스스로 '새 정치'의 주체로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력의 출현 및 확장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시적 바람에 편승해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노리고 출범한 정당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② 광남일보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 10월 27일 00시 07분 송고 기사의 일부를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광남일보는 기존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타 언론사 기사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행위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5 독자불만처리
호남매일 발행인 김 준 수

〈주 문〉

호남매일 2011년 12월 9일자 15면「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호남매일 2011년 12월 9일자 15면「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2월 8일 09시 19분에먼저 게재한 기사다.

호남매일은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싣고도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호남매일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호남매일 12월 9일자 15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
법원, "선거 당일 시작", "선거 다음날부터" 적용

법원이 공소시효를 꽉 채워 기소된 불법선거 연루자들에 대해 시효 기준을 달리 판단,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8일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노재호 판사는 지난 10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기소됐다"며 박씨 등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은 공소시효 적용의 차이에서 나왔다.
수협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 후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규정했다.
박씨 등은 조합장 선거일(지난해 9월 15일)의 6개월 후인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께 기소됐다.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를 하루 넘겼고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라면 시효 만료 전에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의 기준을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음날 0시' 기준을 적용한다면

〈연합뉴스 12월 8일 09시 19분〉

선거범죄 공소시효 놓고 엇갈린 판결
"선거 당일 시작", "선거 다음날부터"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공소시효를 꽉 채워 기소된 불법선거 연루자들에 대해 시효 기준을 달리 판단,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수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도우려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노재호 판사는 지난 10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기소됐다"며 박씨 등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은 공소시효 적용의 차이에서 나왔다.
수협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 후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규정했다.
박씨 등은 조합장 선거일(지난해 9월 15일)의 6개월 후인 지난 3월 15일 오후 7시께 기소됐다.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를 하루 넘겼고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라면 시효 만료 전에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자의 기준을 따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음날 0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선거일 당일에 지은 범죄와 그 다음 날 지은 범죄 모두 다음날 0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며 "해당 선거일 이전 범죄는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선거일 이후 범죄는 범행일 당일 0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고 원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박준영 기자 press5773@hanmail.net

선거일 당일에 지은 범죄와 그 다음 날 지은 범죄 모두 다음날 0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며 "해당 선거일 이전 범죄는 선거일 당일 0시부터, 선거일 이후 범죄는 범행일 당일 0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일 후'라면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셈을 시작하는 것이 통상적 의미이고 원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다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박씨 등은 지난해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조합원들에게 15만~2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기소됐다.

angwon700@yna.co.kr

2-② 호남매일은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결정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 12월 8일 09시 19분 송고 기사의 일부를 삭제하고 거의 그대로 전재했음에도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해 작성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자사 기자 이름을 명기하였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남매일은 기존에 보도된 관련 기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타 언론사 기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한 행위는 명백히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 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6 독자불만처리
全光日報 발행인 박 양 주

〈주 문〉

全光日報 2011년 12월 9일자 1면 「광주 우치동물원 벵갈호랑이 첫 자연포식」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불만제기인은 全光日報 2011년 12월 9일자 1면 「광주 우치동물원 벵갈호랑이 첫 자연포식」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위 사진은 광주시 우치동물원에서 제공한 사진이다. 全光日報는 우치동물원이 제공한 사진을 그대로 싣고도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았다.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① 이에 앞서 피제기인 全光日報는 다음과 같은 기사(사진)를 게재하였다.

〈全光日報 12월 9일자 1면〉

〈뉴시스 12월 8일자〉

2-② 全光日報는 제기인의 불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본사와 뉴시스 통신사와의 기사 제공을 계약 체결해 제작함에 신문 제작 및 편집에 철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光日報는 우치동물원이 제공한 위 사진을 그대로 싣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하였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